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

An In-depth Study of 2008 Korea Welfare Panel Study
- Analyzing Social Indicators -

여유진 · 김계연 · 오지현 · 신재동 · 김민희

연구보고서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여유진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17-3 93330

머리말

사회가 성숙해갈수록 사회상을 보여주는 통계의 중요성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 사회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경제·사회·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역동적 변화상을 보여주는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년도 7,072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원가구 기준으로 2차년도 6,511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92.1%), 3차년도 6,128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6.7%)를 조사 완료함으로써 세계 주요 패널의 표본유지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가구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가구특성, 가구 경제상황, 가구원의 경제활동,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현황과 수급욕구, 여가 및 일상생활, 사회적 자본과 가치관 등 매우 포괄적인 영역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분석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1,2,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배, 주거, 건강 및 의료, 노동, 복지 수급 등의 영역과 관련된 각종 사회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복지패널의 학술적 가치를 확인함과 아울러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여유진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원의 연구진들이 함께 집필한 보고서이다. 김계연 선임연구원, 오지현, 김민희, 신재동 연구원이 자료

분석과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널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조사원과 자료정리를 해준 김은주, 정희라 선생과 본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노대명 연구위원과 이태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격변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복지패널』이 국가 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발전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많은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도 더불어 기대한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1. 연구 목적	9
2. 연구 내용	10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	15
1. 조사개요	15
2.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21
제3장 분 배	27
1.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27
2.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32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4
제4장 주 거	49
1.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51
2.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55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6
제5장 보건의료	69
1.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69
2.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74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6

제6장 노동	109
1. 노동지표 산출 방식	110
2.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114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9
제7장 복지수급	143
1.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143
2.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150
3. 복지수급 지표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165

표 목차

〈표 2- 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15
〈표 2- 2〉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16
〈표 2- 3〉 3차년도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17
〈표 2- 4〉 3차년도 패널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	18
〈표 2- 5〉 3차년도 패널조사 영역	19
〈표 2- 6〉 조사 주제별 구성	21
〈표 2- 7〉 3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비교	22
〈표 2- 8〉 한국 대표 데이터들의 장단점	23
〈표 3- 1〉 인구집단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32
〈표 3- 2〉 지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34
〈표 3- 3〉 행정구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35
〈표 3- 4〉 인구집단별 빈곤지표(중위소득 50% 기준)	36
〈표 3- 5〉 불평등지표	38
〈표 3- 6〉 행정구역별 지니계수 추이	39
〈표 3- 7〉 공적이전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인구집단별)	42
〈표 3- 8〉 공적이전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불평등 감소효과	43
〈표 4- 1〉 주거복지 측정지표	50
〈표 4- 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54
〈표 4- 3〉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55
〈표 4- 4〉 지역별 자가 점유율	55
〈표 4- 5〉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56
〈표 4- 6〉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57
〈표 4- 7〉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면적	57
〈표 4- 8〉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58
〈표 4- 9〉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59

〈표 4-10〉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59
〈표 4-11〉	지역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61
〈표 4-12〉	소득 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61
〈표 4-13〉	소득 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63
〈표 4-14〉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63
〈표 4-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64
〈표 5- 1〉	건강 형평성 지표의 분류	70
〈표 5- 2〉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75
〈표 5- 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76
〈표 5- 4〉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77
〈표 5- 5〉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77
〈표 5- 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78
〈표 5- 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79
〈표 5- 8〉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79
〈표 5- 9〉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81
〈표 5-10〉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82
〈표 5-11〉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83
〈표 5-12〉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83
〈표 5-13〉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84
〈표 5-14〉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84
〈표 5-15〉	우울에서의 보건의료지표	85
〈표 5-16〉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87
〈표 5-17〉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88
〈표 5-18〉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89
〈표 5-19〉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90
〈표 5-20〉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91
〈표 5-21〉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92

〈표 5-22〉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93
〈표 5-23〉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94
〈표 5-24〉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95
〈표 5-25〉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95
〈표 5-26〉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96
〈표 5-27〉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96
〈표 5-28〉	성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96
〈표 5-29〉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97
〈표 5-30〉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98
〈표 5-31〉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99
〈표 5-32〉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100
〈표 5-33〉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101
〈표 5-34〉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102
〈표 5-35〉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103
〈표 5-36〉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04
〈표 6- 1〉	소득 5분위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114
〈표 6- 2〉	소득 5분위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117
〈표 6- 3〉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117
〈표 6- 4〉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118
〈표 6- 5〉	성별 경제활동지표(가구주)	118
〈표 6- 6〉	성별 경제활동지표(가구원 전체)	119
〈표 6- 7〉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119
〈표 6- 8〉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120
〈표 6- 9〉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120
〈표 6-10〉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122
〈표 6-11〉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연도별 추이	123
〈표 6-12〉	소득 5분위별 가구 내 취업자 수	123

〈표 6-13〉 소득 5분위별 가구주 연령	124
〈표 6-14〉 소득 5분위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상태	125
〈표 6-15〉 소득 5분위별 가구주 건강상태	125
〈표 6-16〉 2007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 수	126
〈표 6-17〉 비경제활동 사유의 연도별 차이	127
〈표 6-18〉 소득분위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128
〈표 6-19〉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129
〈표 6-20〉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129
〈표 6-21〉 취업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130
〈표 6-22〉 가구를 포함한 전체 취업가구원	131
〈표 6-23〉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132
〈표 6-24〉 소득분위별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	132
〈표 6-25〉 가구주의 성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134
〈표 6-26〉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성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	134
〈표 6-27〉 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135
〈표 6-29〉 연령별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	136
〈표 6-30〉 소득 5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136
〈표 6-31〉 소득 5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137
〈표 6-32〉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137
〈표 6-33〉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137
〈표 6-34〉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138
〈표 6-35〉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138
〈표 6-36〉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139
〈표 6-37〉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139
〈표 7-1〉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51
〈표 7-2〉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51
〈표 7-3〉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52

〈표 7-4〉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154
〈표 7-5〉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154
〈표 7-6〉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155
〈표 7-7〉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155
〈표 7-8〉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156
〈표 7-9〉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156
〈표 7-10〉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158
〈표 7-11〉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158
〈표 7-12〉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60
〈표 7-13〉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60
〈표 7-14〉 가구형태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60
〈표 7-15〉 지역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61
〈표 7-16〉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61
〈표 7-17〉 가구형태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162
〈표 7-18〉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162
〈표 7-19〉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163
〈표 7-20〉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163
〈표 7-21〉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164
〈표 7-22〉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164

그림 목차

[그림 2- 1] 조사표의 구성	17
[그림 3- 1] 인구집단별 빈곤 추이	33
[그림 3- 2] 지역별·행정구역별 빈곤 추이	35
[그림 3- 3]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37
[그림 3- 4] 행정구역별 지니계수 추이	40
[그림 3- 5] 인구집단별 빈곤 감소율(%p)	41
[그림 4- 1] 지역별 자가 점유율	56
[그림 4- 2]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58
[그림 4- 3]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60
[그림 4- 4]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60
[그림 4- 5] 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62
[그림 4- 6] 소득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63
[그림 4-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2005, 2006, 2007년도)	65
[그림 5- 1]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80
[그림 5- 2]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80
[그림 5- 3] 우울에 대한 인식(우울점수):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86
[그림 5- 4]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86
[그림 5- 5] 흡연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93
[그림 5- 6] 흡연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94
[그림 5- 7] 음주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105
[그림 5- 8] 음주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105
[그림 6- 1]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 지표	115
[그림 6- 2]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 지표	116
[그림 6- 3]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 지표	121
[그림 6- 4] 연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추이	123
[그림 6- 5] 2007년 소득분위별 가구 내 취업자 수	124

[그림 6- 6] 연도별 비경제활동 사유의 추이	127
[그림 6- 7] 연령별 비경제활동 사유의 연도별 추이	130
[그림 6- 8] 2007년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	133
[그림 6- 9] 2007년 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중	135
[그림 6-10]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비율	138
[그림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153
[그림 7-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157
[그림 7- 3]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159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cribe Korea's present situation and its changing aspects in five parts: distribution, housing, health, labor, and social security by analyzing raw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from 1st to 3rd Wave. As the first social indicator, distribution is analyzed with poverty index including poverty ratio and poverty gap, and inequality index containing Gini coefficient, Entropy Index, Atkinson Index, and Distribution ratio. Also the effects of poverty reduction and inequality alleviation have been studied. As the second social indicator, housing is analyzed with the index of housing stability, housing amenity, housing affordability, and housing poverty. Third, health is examined by the index indicating subjective health, depression, smoking behavior and drinking behavior. Fourth, labor is observed with th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the occupation status, the number of family member employed, and the ratio of work in hazardous circumstances. Fifth, social security is analyzed by observing the recipient ratio of the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and the other welfare related services. Since the indicators above are analyzed with the various criteria such as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gender, age, and region, this study gives significant meaning present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social trend in Korea. Also it gives political implication which Korea has to carry out.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해 각 분야별 대표적인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현 상태와 변화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은 분배, 주거, 보건의료, 노동, 복지수급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 부문에서, 빈곤지표인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2005~2007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빈곤율은 매년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불평등 관련 지표 분석한 결과, 중간층의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반면, 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는 약간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의 절대빈곤을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무엇보다도 빈곤 노인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빈곤지표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결과, 노인빈곤율은 전체빈곤율의 3배 이상 높고, 공적이전에 의한 절대빈곤을 감소효과와 빈곤갭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에 의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급여 수준 현실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해소 방안 등을 통한 빈곤노인에 대한 다층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거 부문에서 주거 안정성, 주거 쾌적성(주거의 양·질), 주거비 부담, 주거빈곤 지표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자가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쾌적성 측면에서는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1인당 주거면적이 좁고,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주거안정성 뿐만 아니라 주거 쾌적성과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9.47%, 2006년 20.04%, 2007년 17.5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주거욕구가 미충족 된 가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보건의료 부문의 분석 결과, 하위 소득분위 계층이 상위 소득분위 계층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점수 모두 저소득계층일수록 낮고,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흡연율은 소득계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은 오히려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은 특정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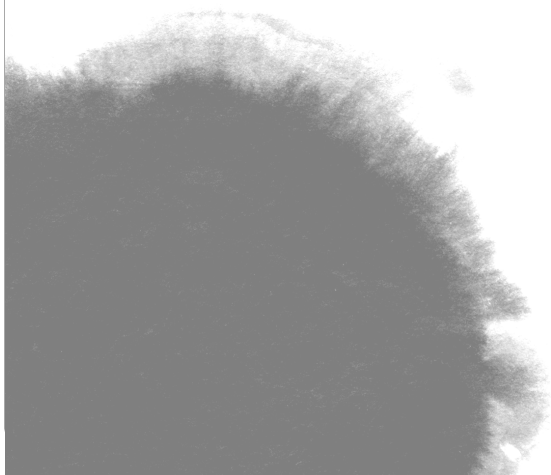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넷째, 대표적인 노동관련 지표를 선정해 소득수준,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주요 기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득 하위계층일 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 등과 같이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분위별로 취업자 수의 비중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이면에는 청년층의 학업 연장과 중장년층의 구직활동 포기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 분석 결과, 소득 하위계층에서 자영업과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근로 비율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여자

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한 결과,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 국민연금만을 분석하면 6%에 불과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약가구원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약 20%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01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활용한 다방면의 사회지표를 산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1차 웨이브를 시작으로 2008년 3차 웨이브 데이터까지를 공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며, 기존 횡단면 조사나 종단면 조사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1차 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원가구 기준으로 2차년도 6,511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92.1%), 3차년도 6,128가구(원가구 표본유지율 86.7%)를 조사 완료함으로써 세계 주요 패널의 표본유지율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각 영역 - 분배, 주거, 건강 및 의료, 노동, 복지수급 -에서 주요한 사회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물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상』과 같은 총괄자료에서 더 포괄적이고 다방면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표성 있는 패널 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일관성 있고 역동적인 지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을 기대된다.

둘째, 각 영역별 사회지표의 변화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복지패널의 정책적 활용도와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사회정책은 그 나라의 재정

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밀하고 체계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사회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사회통계들이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는 매우 방대한 변수를 담고 있는 만큼 자료가 복잡하다.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과 자극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에서는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한국복지패널의 연혁과 표본추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 조사 절차 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제3장 “분배”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분배 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경상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등의 불평등 지표를 인구학적 기준—전체, 노인, 아동—과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주거”에서는 주거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특성 및 주거서비스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주거지표로는 자가 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3인 이상 단칸방 거주비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이다. 특히, 이러한 주거지표를 소득 5분위별로 제시함으로써 계층별 주거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5장 “보건의료”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분석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 부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 정도, 건강행태 부문에서 흡연과 음주실태를 소득 5분위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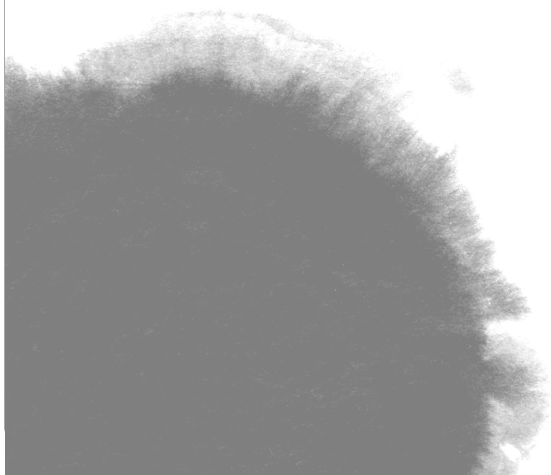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제6장 “노동”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관련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 상태를 보여주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등의 지표와

종사상의 지위, 비경제활동 사유, 유해환경 노출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관련 지표 역시 소득 5분위와 성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 “복지수급”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별 사회서비스와 주거, 교육, 의료 등 대상별 사회서비스의 수급률과 수급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02

한국복지패널 개관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¹⁾

1. 조사개요

가. 표본추출 및 조사완료율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읍면지역의 농어가까지 포함함으로써 대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1차 조사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가구²⁾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패널 원 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세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 2-1〉 한국복지패널 표본추출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 사 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 구 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 표 성	-	전 국	전 국

1) 본 장은 김미곤 외 (2008)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의 제1장~제4장을 발췌·수정·정리한 것이다.

2) 목표 표본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조사결과 7,072가구가 조사완료되었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미만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³⁾. 물론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전국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가중치를 통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먼저 2차 년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2차 년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원가구와 3차 년도에 조사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으로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패널가구 및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조사년도	가 구		가 구 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7,072	-	14,463	-
2차	6,511	92.06%	13,083	90.46%
3차	6,128	86.65%	12,191	84.29%

3차 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 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126가구이며, 가구원은 537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27가구를 추적 조사하여 추가로 원 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한 패널관리를 함으로서 유지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원 표본 가구와 원 표본가구원을 합한 2차년도 표본가구 및 가구원수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즉, 1차년도 대비 3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9.28%의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90.02%로서 1차년도 대비 90%이상의 완료율을 보였다.

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3차년도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구 분	가 구		가 구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6,188	87.50%	12,393	85.69%
신 규	126	1.78%	537	4.33%
계	6,314	89.28%	12,930	90.02%

나. 조사표 구성 및 조사 내용

(1)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3차년도 조사는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가구용과 가구원용, 부가조사표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용의 경우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 주 중심)로부터 분리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3차 신규가구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그림 2-1] 조사표의 구성



또한 가구원용의 경우 2차년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을 조사하기 위한 3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부가조사표는 각 년도마다 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혹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번씩 반복-으로 조사된다. 3차년도에는 부가조사로 장애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대상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3차년도 패널조사표 각각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구용 조사표는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 기준 기간은 2007년 1년, 기준 시점은 2007년 12월 31일로 하였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신규진입자와 200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조사표의 조사방법 및 조사 기준 기간과 시점은 가구용 조사표와 동일하다. 3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장애인 설문조사(의 대상)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으로 하였다. 장애인 설문조사표의 기준 응답시점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달 이내 혹은 1주일 이내이다.

〈표 2-4〉 3차년도 패널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가구용 설문지(유형1·2)	가구원용 설문지(유형3·4)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조사대상 기간: 2007.1.1~12.31 기준 응답시점: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 (중고생 제외, 신규진입자 포함) 200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대상 기간: 2007.1.1~12.31 기준 응답시점: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 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 기준 응답시점: 응답시점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달 이내 혹은 1주일 이내

- 4) 장애인 부가조사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유형별 분포 상에서 지체장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체 장애와 비등률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유형을 모두 표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지체장애와 비등률 장애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졌다.

(2) 조사 내용

한국복지패널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장애인) 각 조사표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는 조사표로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주로 의식 관련 영역-으로 7개 영역(단, ‘개인사’의 경우 3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 조사표(장애인)는 공통으로 응답하는 영역 2개와 해당 대상별로 응답하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5〉 3차년도 패널조사 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공통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 유형2)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추가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 유형2)	<p>VIII. 소득 - 9개월 미만 동거가구원의 소득(전입, 전출 가구원으로 구분)</p> <p>XI. 생활여건 -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자격 정지여부 - 식생활(영양복지) 문항</p> <p>XII. 국민기초생활보장 - 급여수준 평가</p> <p>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여부 및 만족도</p> <p>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국공립(사회복지)보육시설(어린이집)로 한정함 -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기관의 보기문항에 이웃,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민간 아이돌보미로 세분화하여 포함함.</p>

〈표 2-5〉 계속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공통 조사 영역	가구원용 (유형3· 유형4)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B. 근로	F. 교육
추가 조사 영역	가구원용 (유형3· 유형4)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F. 교육
		- 성역할에 관한 문항	- 최종학력/출신 고등학교 유형과 소재지/ 출신 대학 전공계열과 소재지다문화 가정 여부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 생애동안의 흡연총량, 흡연기간, 담배를 처음피운시기, 하루평균 흡연량, 금연 시도여부, 간접흡연 여부와 노출시간	다문화 가정 여부
부가조사용 (장애인 설문)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개별II)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설문 (개별III) 성인(만 18~65세 미만)설문 (개별IV) 어르신(만 65세 이상)설문	

이상 3개 조사표의 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에 나뉘어져 있다.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실태는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가계수지 및 재산 관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근로 관련한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배치되었으며, 객관적인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상태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기타 개인의 의식과 관련한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장애인)에 배치되었다.

〈표 2-6〉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조사표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조사표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조사표 XV. 아동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조사표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조사표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조사표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	1) 사회보험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조사표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조사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조사표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조사표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및 부채	가구용 조사표 IX. 부채 및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조사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2) 장애인	장애인 부가 조사표

2.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장점과 함께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⁵⁾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규모는 5,000가구 내외이거나 미만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차연도 조사 완료된 가구는 6,580가구이고, 3차조사 완료 가구수는 6,314가구이다(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조사로서 2009년 현재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읍면동에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 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이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고, 중산층은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은 통계청보다 약간 높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전국의 모수치와 가장 유사한 표본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표본 추출시 전국 30,000가구에 대한 1차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중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함으로써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2차·3차연도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다른 유수의 패널보다 높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차연도 원가구유지율 92.1%(7,072 원가구 중 6,511가구 완료)이고, 3차연도 원가구 표본유지율 또한 86.7%(7,072 원가구 중 6,128가구 완료)로 나타나 국내외 주요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다.

〈표 2-7〉 3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비교

	한국복지패널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년도 표본가구 유지율	92.1%	87.6%	79.0%	89.0%	87.7%	89.9%
3차년도 표본가구 유지율	86.7%	80.9%	66.0%	86.3%	81.5%	86.0%

여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표 2-8〉 한국 대표 데이터들의 장단점

데이터명	장점	단점
가계조사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공신력 · 오랜 데이터 축적(1982~2008) · 월별·분기별·연간 데이터 제공 · 많은 표본수 확보(전국 9,000여가구) · 세분류 지출비목별 지출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이전까지는 2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데이터만 제공(2003~5년: 자영자, 농어촌 근로자 포함, 2006~ : 1인 포함), 여전히 농어가는 제외 · 횡단데이터로 역동성(패널)분석 불가능⁶⁾ · 소득(특히, 공적이전소득)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각종 재산변수, 공공부조 수급 여부 등의 변수 누락
한국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패널(2008년 11차) · 풍부한 노동관련 변수 및 지역변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짐(농어가, 제주 등 제외) · 복지관련 변수가 상대적으로 미흡(공공부조 수급여부 등은 비교적 최근에 포함)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표본 유지율 및 표본수(1차 7,072가구) · 높은 표본 대표성(농어가, 제주 포함 전국) · 저소득층 과대표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독자적 분석 가능 · 소득변수의 세분화 및 소득과약의 정확성 · 풍부한 복지관련 변수 및 지역변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역사로 패널분석이 불완전(2008년 3차) · 노동관련 변수가 상대적으로 미흡(월별 노동지위 변화 등)

일곱째,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다양한 영역의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내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초에 조사를 실시하면, 회상의 문제는 줄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과약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의 부족이다. 매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연도에 기초분석보고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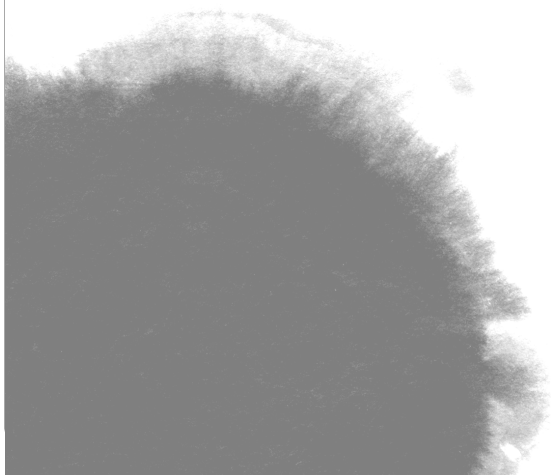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6) 가계조사는 5년 단위의 로테이션 패널이지만 일반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분기별·연도별 종단분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발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진은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 체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항들이 있음을 밝힌다. 양질의 조사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에러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사실 패널조사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크,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03

분배



제3장 분배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 대표적인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중심으로 산출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지표와 불평등지표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⁷⁾

가. 빈곤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 지표, 즉 빈곤율(HR: Headcount Ratio)과 빈곤갭비율(PRG: Poverty Gap Ratio)을 사용하였다.

먼저, 빈곤율(HR)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R(y, z) = \frac{q}{n}$$

여기서 HR은 빈곤율, q 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 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 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

7) 소득분배 지표 산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하였다.

는 빈곤선을 나타낸다. 위에서 계산된 빈곤율은 빈곤의 전체적인 수준을 표현하는데 좋은 지표이지만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이 느끼는 박탈의 정도, 즉 빈곤의 심도(depth)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빈곤율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빈곤지표로는 빈곤갭비율(PGR)을 들 수 있다. 먼저, 빈곤갭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즉, 개인(또는 가구) n 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 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차($g_i = z - y_i$)로 정의되며, 총빈곤갭은 빈곤층 전체의 빈곤갭을 합한 $\sum_{i \in z(y)} g_i = \sum_{i=1}^q (z - y_i)$ 가 된다. 여기서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GR = \frac{\sum_{i=1}^q (z - y_i)}{z q}$$

여기서 PGR은 빈곤갭 비율, z 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혹은 지출), 그리고 q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빈곤갭 비율은 빈곤율과 달리 빈곤의 심각성 또는 심도(depth)를 나타내 주지만 빈곤의 규모는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나. 불평등지표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와 더불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앳킨슨지수, 분배율 등이 사용되었다.

지니계수는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츠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사선 아래 쪽의 삼각형 지역-로서 측정된다.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

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평균 차의 정확히 절반(1/2)이다. 이를 산출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 &= (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text{ 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end{aligned}$$

다음으로, 타일(Theil, 1967)에 의해 제기된 불평등 측정치인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를 좀 더 보편적인 공식으로 바꾼 것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GE(\alpha) = \frac{1}{\alpha^2 - \alpha} \left[\frac{1}{n} \sum_i \left(\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여기서 y 는 개인(혹은 가구) i 의 소득을 의미하며, μ 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α 값은 각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이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지수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α 값은 0, 1, 2이다. 여기서 $\alpha=0$ 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alpha=1$ 이면, 모든 소득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alpha=2$ 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소득 변화에 보다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GE(0)$, $GE(1)$, $GE(2)$ 를 산출하여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엡킨슨(Akinson, 1970)은 로렌츠 곡선에 기초하여 사회후생을 비교할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박찬용 외, 1999), 이를 엡킨슨지수라 한다. 엡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level of income, y_{EDE})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어떤 총소득의 수준이 있어 만약 이 수준의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기만 한다면 현재의 분배상태 하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후생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할 때, 이 총소득의 평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의 분배상태에 불

평등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사회후생이 저하되고 있는 한 현실의 평등분배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며,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면 실패할수록 양자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세워진 앳킨슨지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다(이준구, 1992)

$$A = 1 - (y_e/\mu)$$

앳킨슨지수에서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y_e 는 μ 와 동일하고 앳킨슨 측정치 값은 0이 될 것이다. 어떠한 분포에서든, A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 앳킨슨 지수는 위험이론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 위험이 포함된 선택과 위험이 포함되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하여야 하는 최대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A_\varepsilon = 1 - \left[\frac{1}{N} \sum \left(\frac{y_i}{\mu} \right)^{1-\varepsilon} \right]^{\frac{1}{1-\varepsilon}} \quad \varepsilon \neq 1, \varepsilon \geq 0$$

$$= 1 - \exp \left[\frac{1}{N} \sum \ln \frac{y_i}{\mu} \right] \quad \varepsilon = 1$$

여기에서, 파라미터 ε 는 불평등을 혐오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ε 이 커질수록 사회구성원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varepsilon = 0$ 이면 불평등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varepsilon = 0$ 인 경우에는 $A_\varepsilon = 0$ 이 되고, 사회후생은 분배에는 무관하고 소득 증대 (효율성)에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X, Y 두 분배 상태가 동일한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따라 A_ε 값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층의 소득 y_j 가 빈곤층의 소득 y_i 보다 4배 더 많고,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빈곤층이 만원을 받기 위해 부유층이 지출해야 하는 조세는 4ε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불평등도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부유층의 조세 규모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A(0)(\varepsilon = 0)$ 과 $A(1)(\varepsilon = 1)$ 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배율은 하위 분위의 평균(총)소득 대비 상위 분위의 평균(총)소득의 비율을 표시한 값으로 본문에서는 하위 1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

득을 나타내는 P90/P10과 하위 25%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25%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P75/P25를 제시하고 있다.

다. 소득의 정의와 빈곤선 기준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산출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민간부문(시장)소득,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각 소득은 다음과 같은 하위소득의 합산액으로 계산된다.

<소득의 정의>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 사회보험분담금)

빈곤은 정책의 효과와 국가간 비교의 각각 상이한 목적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기준과 중위소득 50% 기준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주지할 사실은 기초보장수급자 유무에 따라,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금급여기준선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와 별도로 다양한 현물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율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급여기준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빈곤선 기준>

절대빈곤선: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

상대빈곤선: 중위소득 5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특히 빈곤율 산정에서는 가구단위 빈곤율이 종종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석단위는 개인단위이며,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석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을 단위로 분배지표를 산출하였다.

2.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가. 빈곤

(1)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지표

먼저, 아래 표 3-1과 그림 3-1에서는 전체, 노인, 아동의 최저생계비 기준(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 빈곤율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2005~2007년 동안 전체, 아동, 노인의 빈곤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와 아동 빈곤율은 매년 큰 폭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21.87%로 전체 빈곤율(6.15%)과 아동 빈곤율(3.68%)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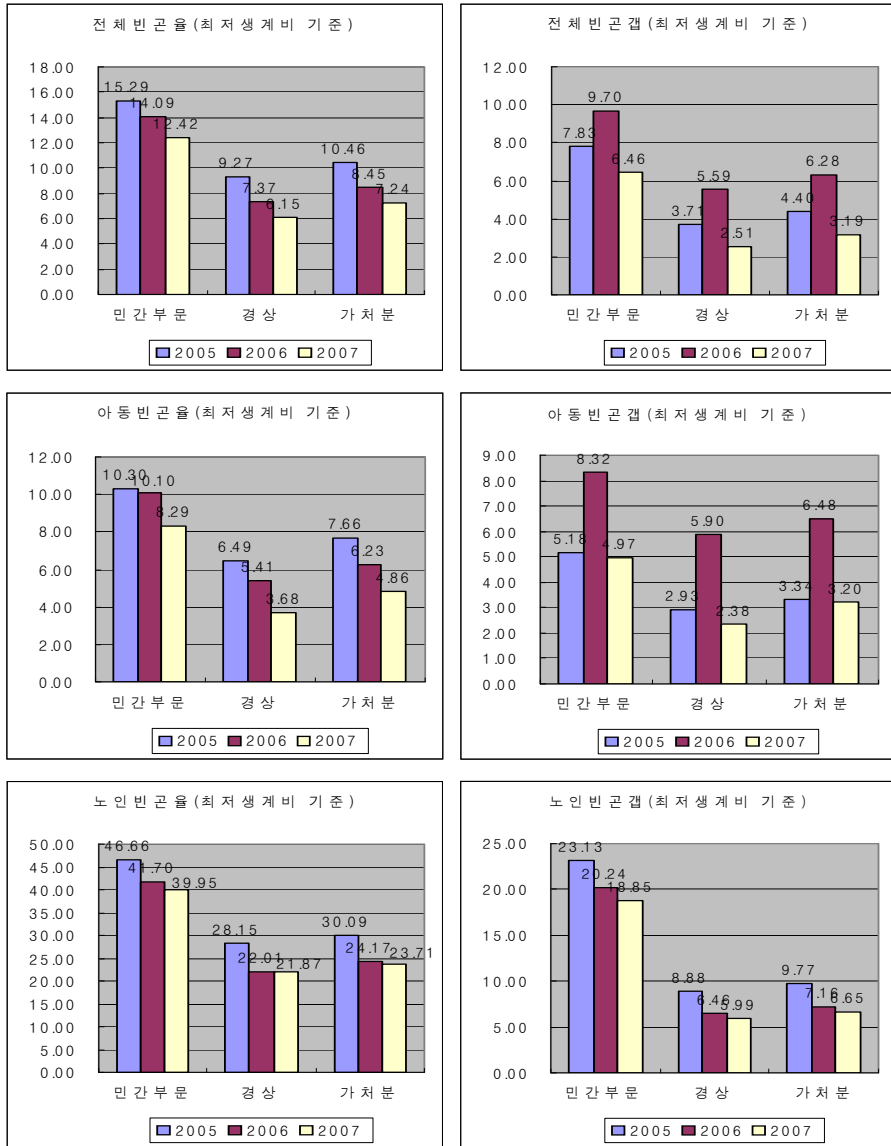
〈표 3-1〉 인구집단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민간부문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전체	빈곤율	2005	15.29	9.27	10.46
		2006	14.09	7.37	8.45
		2007	12.42	6.15	7.24
	빈곤감비율	2005	7.83	3.71	4.40
		2006	9.70	5.59	6.28
		2007	6.46	2.51	3.19
아동	빈곤율	2005	10.30	6.49	7.66
		2006	10.10	5.41	6.23
		2007	8.29	3.68	4.86
	빈곤감비율	2005	5.18	2.93	3.34
		2006	8.32	5.90	6.48
		2007	4.97	2.38	3.20
노인	빈곤율	2005	46.66	28.15	30.09
		2006	41.70	22.01	24.17
		2007	39.95	21.87	23.71
	빈곤감비율	2005	23.13	8.88	9.77
		2006	20.24	6.46	7.16
		2007	18.85	5.99	6.75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3-1] 인구집단별 빈곤 추이



주: 1) 2005~2007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사용
 2) 일반가구는 최저생계비 기준, 기초보장 수급가구는 현금급여기준선 기준으로 산출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지역별 빈곤율은 아래 표 3-2, 3-3과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빈곤율은 도시지역의 빈곤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농어촌의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⁸⁾.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전 지역의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빈곤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 비해, 중소도시의 빈곤율은 약간 감소하는 데 그쳤다.

행정구역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빈곤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빈곤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빈곤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강원·충북과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경우 그 추세가 2007년까지 이어졌다. 반면, 대전·충남 지역의 빈곤율은 동 기간 동안 오히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3-2〉 지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구 분	연 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소득
대도시	2005	14.2	7.9	8.8
	2006	13.4	6.6	7.7
	2007	10.9	4.7	5.7
중소도시	2005	13.8	8.6	10.2
	2006	12.7	6.8	7.9
	2007	12.0	6.4	7.5
농어촌	2005	30.3	20.7	21.6
	2006	26.6	15.5	16.6
	2007	24.1	13.5	14.7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8) 한국복지패널 3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9.6세로 대도시(50.9세)와 중소도시(49.7세)보다 10세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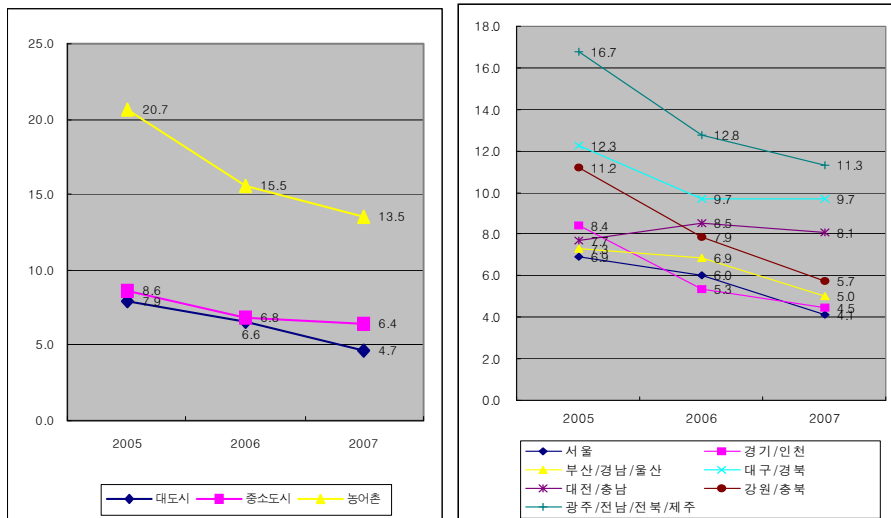
〈표 3-3〉 행정구역별 빈곤지표(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구 분	연 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소득
서울	2005	10.9	6.9	7.9
	2006	10.1	6.0	7.0
	2007	8.4	4.1	5.0
경기/인천	2005	13.2	8.4	10.1
	2006	11.2	5.3	6.5
	2007	9.5	4.5	5.7
부산/경남/울산	2005	13.7	7.3	7.8
	2006	14.7	6.9	7.6
	2007	11.7	5.0	5.5
대구/경북	2005	20.8	12.3	13.3
	2006	18.2	9.7	11.2
	2007	18.7	9.7	10.8
대전/충남	2005	16.1	7.7	9.7
	2006	14.9	8.5	10.2
	2007	13.9	8.1	9.8
강원/충북	2005	16.5	11.2	12.0
	2006	15.3	7.9	9.2
	2007	12.4	5.7	7.5
광주/전남/전북/제주	2005	26.2	16.7	18.1
	2006	23.3	12.8	13.6
	2007	21.3	11.3	12.7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3-2〕 지역별 · 행정구역별 빈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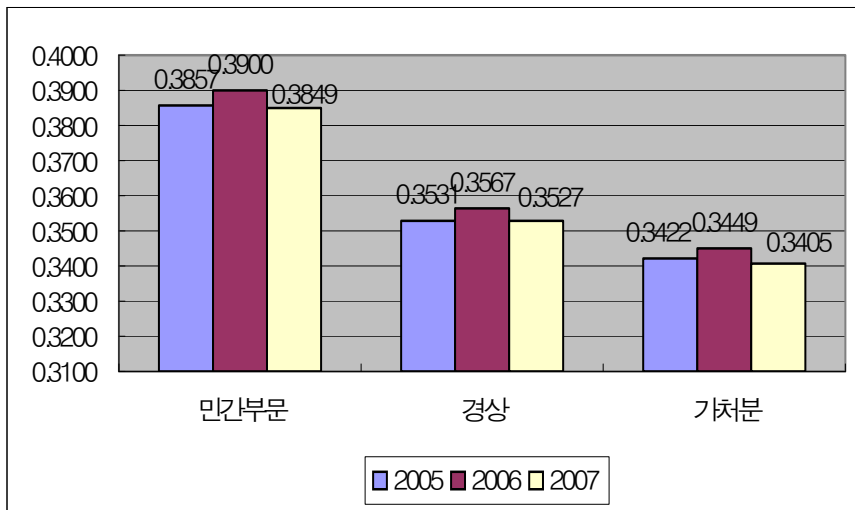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나. 불평등 지표

다음으로 아래 표 3-5와 그림 3-3은 2005년에서 2007년 동안의 불평등 추이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빈곤율과는 달리 동 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일관된 하락의 추세를 보이는 대신, 2006→2007년 동안 약간 상승하다가 2007년→2008년 동안 다시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소득분포의 양 끝 부분에 주목하는 P90/P10, P25/P75의 경우는 동 기간 동안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득분포의 모든 부분에서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양극점의 상태를 비교하는 P90/P10 및 P25/P75가 상이한 추세를 보이는 것은 중간층의 소득분배가 약간 악화된 반면, 저소득계층의 소득분배는 약간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동 기간 동안 빈곤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는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3-5〉 불평등지표

		민간부문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2005	0.3857	0.3531	0.3422
	2006	0.3900	0.3567	0.3449
	2007	0.3849	0.3527	0.3405
GE(0)	2005	0.3505	0.2443	0.2366
	2006	0.3455	0.2432	0.2348
	2007	0.3303	0.2316	0.2229
GE(1)	2005	0.2553	0.2110	0.1987
	2006	0.2638	0.2186	0.2058
	2007	0.2593	0.2162	0.2038
GE(2)	2005	0.2905	0.2509	0.2323
	2006	0.3144	0.2716	0.2539
	2007	0.3186	0.2791	0.2639
A(0.5)	2005	0.1335	0.1051	0.1000
	2006	0.1352	0.1069	0.1015
	2007	0.1316	0.1042	0.0988
A(1)	2005	0.2957	0.2167	0.2107
	2006	0.2921	0.2159	0.2093
	2007	0.2813	0.2068	0.1998
A(2)	2005	0.7571	0.5696	0.5973
	2006	0.7320	0.5447	0.5789
	2007	0.7069	0.4875	0.5308
p90/p10	2005	8.33	5.97	5.49
	2006	7.95	5.78	5.43
	2007	7.92	5.67	5.24
p75/p25	2005	2.73	2.46	2.38
	2006	2.71	2.47	2.34
	2007	2.61	2.36	2.2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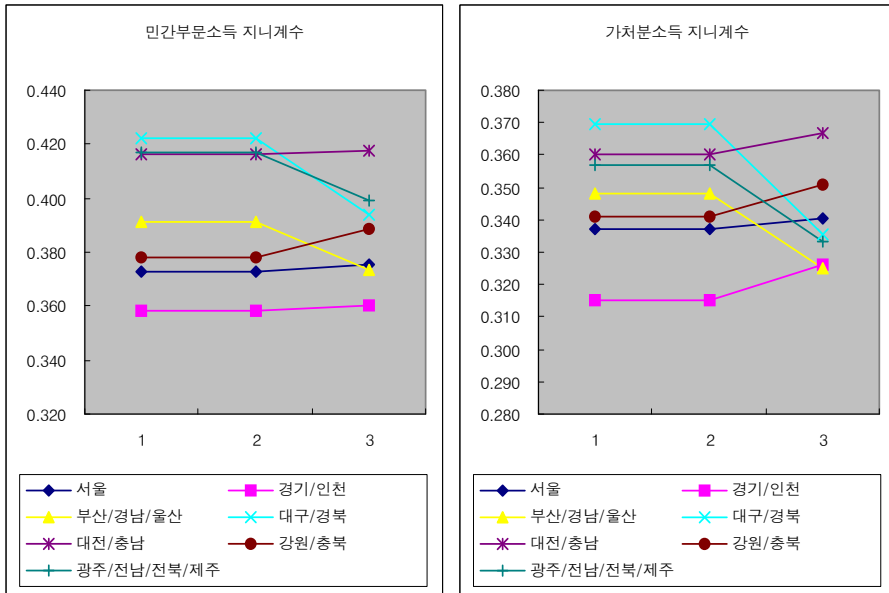
표 3-6과 그림 3-4는 행정구역별 지니계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수준 역시 경기·인천과 서울 지역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지역 간에 다소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경남 지방의 불평등 수준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 경기·인천, 서울, 강원·충북, 대전·충남의 불평등 수준은 소폭의 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별 불평등 순위가 2005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6〉 행정구역별 지니계수 추이

		민간부문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서울	2005	0.373	0.349	0.337
	2006	0.373	0.349	0.337
	2007	0.375	0.351	0.340
경기/인천	2005	0.358	0.328	0.315
	2006	0.358	0.328	0.315
	2007	0.360	0.335	0.326
부산/경남/울산	2005	0.391	0.358	0.348
	2006	0.391	0.358	0.348
	2007	0.373	0.338	0.325
대구/경북	2005	0.422	0.378	0.370
	2006	0.422	0.378	0.370
	2007	0.394	0.348	0.336
대전/충남	2005	0.416	0.379	0.360
	2006	0.416	0.379	0.360
	2007	0.418	0.387	0.367
강원/충북	2005	0.378	0.350	0.341
	2006	0.378	0.350	0.341
	2007	0.388	0.362	0.351
광주/전남/전북/제주	2005	0.417	0.369	0.357
	2006	0.417	0.369	0.357
	2007	0.399	0.346	0.333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3-4] 행정구역별 지니계수 추이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 재분배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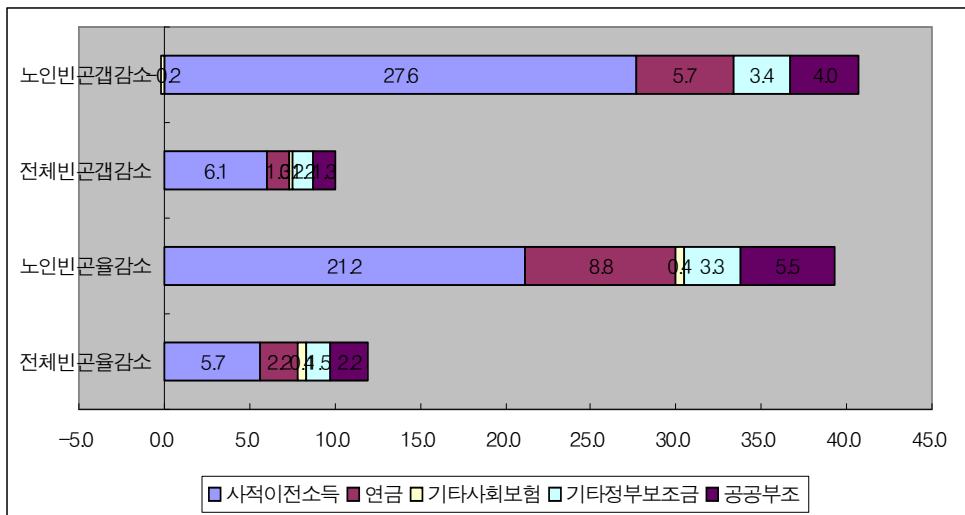
(1)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최저생계비(단,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동일)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을 감소효과는 정책의 직접적 효과를 보는데 매우 의미 있는 기준이다. 아래 표 3-7은 인구집단별로 공적이전의 절대빈곤을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⁹⁾.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이루어진 일차소득의 절대빈곤율은 18.1%로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민간부문소득의 절대빈곤율은 12.4%이며, 다시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경상소득의 빈곤율은 6.2%이다. 경상소득 빈곤율은 일차

9)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보다는 주로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측정이 가계지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가계지출은 경상소득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보장 수급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경상소득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득 빈곤율의 34.0% 수준이다. 공적이전의 총빈곤율 감소효과는 -6.3%p로 사적이전의 총빈곤율 감소효과 -5.7%p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연금과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가 각각 -2.2%p로 공적 이전소득 중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 경로연금(2007년 당시), 모부자가정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으로 구성된 기타 정부보조금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도 -1.5%p다. 그러나 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0.4%p에 불과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저생계비 이하 집단의 최저생계비와 소득 간의 평균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비율의 경우, 일차소득 12.5%→민간부문소득 6.5%→경상소득 2.5%이다. 공적이전의 총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4.0%p로 민간부문소득에 비해 빈곤갭비율을 46.4% 감소시켰다. 그러나 빈곤율과는 달리 공적이전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사적이전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6.1%p)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사적이전액이 공적이전액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연금(-1.3%p)=기초보장급여(-1.3%p)>기타정부보조금(-1.2%p)의 순이며, 기타 사회보험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역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인구집단별 빈곤 감소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 원자료.

〈표 3-7〉 공적이전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인구집단별)

		일차 소득	민간부문 소득					경상소득
			총사적 이전효과	연금효과	기타사회 보험효과	기타정부 보조금효과	공공부조 효과	총공적 이전효과
전체	빈곤율(%)	18.1	12.4	10.2	9.8	8.3	6.2	6.2
	절대효과(%p)	-	-5.7	-2.2	-0.4	-1.5	-2.2	-6.3
	상대효과(%)	-	-31.3	-17.6	-4.1	-15.1	-26.2	-50.5
	빈곤갭비율(%)	12.5	6.5	5.2	5.0	3.8	2.5	2.5
	절대효과(%p)	-	-6.1	-1.3	-0.2	-1.2	-1.3	-4.0
	상대효과(%)	-	-48.4	-19.8	-4.1	-23.9	-33.6	-61.1
아동	빈곤율(%)	11.1	8.3	8.0	7.5	5.6	3.7	3.7
	절대효과(%p)	-	-2.8	-0.3	-0.5	-1.9	-1.9	-4.6
	상대효과(%)	-	-25.3	-3.7	-6.7	-25.3	-34.0	-55.6
	빈곤갭비율	7.1	5.0	4.8	5.6	3.3	2.4	2.4
	절대효과(%p)	-	-2.1	-0.2	0.8	-2.2	-1.0	-2.6
	상대효과(%)	-	-29.8	-4.1	16.9	-40.1	-28.7	-52.2
노인	빈곤율(%)	61.1	39.9	31.1	30.7	27.4	21.9	21.9
	절대효과(%p)	-	-21.2	-8.8	-0.4	-3.3	-5.5	-18.1
	상대효과(%)	-	-34.7	-22.0	-1.4	-10.7	-20.2	-45.3
	빈곤갭비율(%)	46.5	18.9	13.1	13.3	10.0	6.0	6.0
	절대효과(%p)	-	-27.6	-5.7	0.2	-3.4	-4.0	-12.9
	상대효과(%)	-	-59.5	-30.3	1.4	-25.2	-39.9	-68.2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 원자료.

다음으로,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일차소득 기준 11.1%, 민간부문소득 기준 8.3%, 경상소득 기준 3.7%로 전체 인구의 절대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볼 노인과 달리 아동의 경우 사적이전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동이 주로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보장급여(-1.9%p)와 기타정부보조금(-1.9%p)의 빈곤감소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일차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61.1%로 10명 중 6명 이상이 빈곤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일차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민간부문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39.9%,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율도 21.9%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절대빈곤율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으로 인한 절대빈곤율 감소효과는 -21.2%p로 일차소득 대비 34.7% 빈곤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

에 의한 절대빈곤을 감소효과는 -18.1%p로 사적이전효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적이전 중 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8.8%p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초보장급여(-5.5%p), 기타 정부보조금(-3.3%p)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12.9%p로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27.6%)에 크게 못미쳤다. 이는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에 비해 액수 면에서는 크게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 수치의 측면에서 공적이전소득은 노인집단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노인빈곤율 자체가 매우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상대적인 빈곤감소율, 즉 노인의 민간부문소득 대비 경상소득의 빈곤감소율은 45.3%로 전체 50.5%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불평등 감소율을 통한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

아래 표 3-8은 축차적 방식에 의한 공적이전 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험부담금의 불평등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8〉 공적이전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불평등 감소효과

	일차 소득	민간부문 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총사적이전효과	연금 효과	기타 사회 보험 효과	기타 정부 보조금 효과	공공 부조 효과	총공적이전효과	직접세 효과	사회 보험 부담금 효과	총조세 효과
지니계수	0.420	0.385	0.371	0.369	0.360	0.353	0.353	0.343	0.340	0.340
절대효과	-	-0.035	-0.014	-0.002	-0.009	-0.007	-0.032	-0.009	-0.003	-0.012
상대효과(%)	-	-8.41	-3.53	-0.58	-2.44	-2.07	-8.36	-2.61	-0.86	-3.45
불평등감소효과 (100기준)	100.00	91.59	88.36	87.85	85.71	83.93	83.93	81.74	81.04	81.04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 원자료

지니계수를 통한 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소득의 지니계수는 0.385로 일차소득의 지니계수(0.420)에 비해 0.032(일차소득 대비 8.4%) 낮으며,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로 민간부문소득에 비해 0.033(민간부문소득 대비 8.6%) 낮았다. 세부 소득별로는 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높아서 지니계수를 0.01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정부보조금(0.009), 기초보장급여(0.007)의 순이었다.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은 지니계수를 0.012(경상소득 대비 3.5%)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과, 즉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05~2007년 기간 동안 절대 빈곤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불평등은 2006년 약간 증가하다가 2007년 다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 빈곤의 감소 현상은 그 안에 약간의 착시현상을 포함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정부 공식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빈곤선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05년(계측연도) 7.7%인데 비해 2006년과 2007년(비계측연도) 각각 3%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상승률(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각각 3.2%, 6.3%, 6.0%)과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의 절대 빈곤 감소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절대 빈곤선이 평균적인 소득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결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소득의 상대빈곤율 역시 16.3%(2005년)→16.2%(2006년)→15.4%(2007년)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동 기간 동안 빈곤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에 따른 빈곤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농어촌의 빈곤율은 도시 빈곤율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방의 빈곤율은 서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인구학적 구성

과 산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공적이전은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효과는 연금과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높았다. 공적이전의 빈곤감소의 절대 효과는 전체 인구집단의 경우 사적이전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절대 빈곤감소효과가 -18.1%p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노인에 있어 여전히 사적이전은 공적이전보다 약간 더 높은 빈곤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적이전 후에도 노인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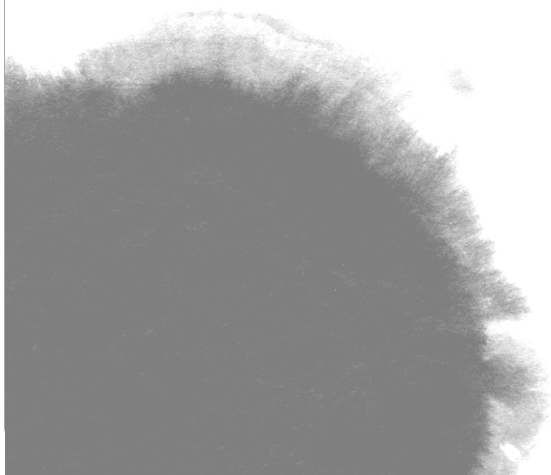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 특히 공적 이전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사적 이전의 감소효과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율과 빈곤갭 감소효과 측면에서 첫째, 공적 연금과 공공부조의 절대빈곤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도의 기능과 목표 달성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저하된 노인계층의 절대빈곤율 감소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공적 이전 후에도 여전히 빈곤율이 22%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노인빈곤을 감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¹⁰⁾. 둘째, 아동의 경우 비록 빈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정책개입의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금급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아동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의 신설이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확대를 검토해 봄직하다. 셋째, 절대적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빈곤갭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약간의 이전지출을 통해 비교적 큰 탈빈곤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기구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확대보다는 대상별·유구별 급여-예컨대, 장애수당, 아동수당,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표적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볼 때 공적 이전 후에도 농어촌 지역의 빈곤율

10)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기준시점(2007)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최근 신설된 제도들에 대한 분석의 향후 과제로 남겨진다.

은 도시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는 현재 최저생계비가 일률적으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평균소득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FTA 체결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04

주거



제4장 주 거

본 장에서는 주거복지 지표를 이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특성 및 주거복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거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윤주현·김근용·박천규 외(200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주거 안정성, 주거의 양, 주거의 질, 주거비 부담, 주거빈곤 지표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포함되는 세부지표는 한국복지패널자료로 분석이 가능한 몇 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표가 가지는 의미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거안정성 지표는 얼마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거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양적지표는 특정지역 거주가구의 주거소비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을 측정하였다. 질적지표는 개별가구의 주거소비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비율을 구하였다. 주거비부담 지표는 소득에 대비한 개인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표 4-1〉 주거복지 측정지표¹¹⁾

구분	지표	의의	측정방법	분석 가능 여부
주거 안정성 지표	자가점유율	주거안정성	$\frac{\text{자가거주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
	평균 거주기간	주거안정성	조사년도 - 이사년도 + 1	×
	강제이동 비율	주거안정성	“주거부담이 비싸서/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의 이사이유를 선택한 가구의 비율	×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정도	$\frac{\text{주택수(소유권기준)}}{\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1인당 주거면적	개인의 주거소비량, 주거밀도	$\frac{\text{가구전용면적}}{\text{가구원수}} \times 100$	○
질적 지표	건축경과연수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	조사년도 - 신축년도 + 1	×
	3인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조밀도	$\frac{\text{3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수}}{\text{3인이상가구수}} \times 100$	○
	주거만족도 (시설, 환경, 주변편의)	개별가구가 느끼고 있는 만족도	4점 척도	×
주거비 부담 지표	PIR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비율)	주택구입부담	$\frac{\text{주택구입가격}}{\text{연소득}}$	×
	RIR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정도	$\frac{\text{임대료}}{\text{월소득}} \times 100$	○
	PTI (월소득대비 상환액 비율)	주택자금대출의 상환능력 측정	$\frac{\text{월상환액}}{\text{월소득}} \times 100$	×
	LTV (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 비율)	주택구입의 초기부담정도 측정	$\frac{\text{대출금액}}{\text{주택구입가격}} \times 100$	×
주거 빈곤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시설·침실· 면적)를 산정	○

11) 주거복지 지표는 유주현 외(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 주거서비스 지표의 개발 및 측정』, 국토연구원. 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1.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가.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내 집이라는 안정감과 자산 가치 상승기대, 그 사회의 주거안정성을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 자가 점유율을 구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주거의 점유형태(h0106_3=1) 변수를 2차년도에서는 주거 점유형태(h0206_3=1) 변수를 3차년도에서는 주거 점유형태(h0306_3=1)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ext{자가점유율} = \frac{\text{자가거주가구수}}{\text{전체가구수}} \times 100$$

나.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개인의 주거 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거밀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윤주현 외, 2005:53).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계층별(소득5분위별)·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을 측정하였다. 1차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106_5), 가구원수(h0101_1)변수를 2차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206_5), 가구원수(h0201_1)변수를 3차년도에서는 주거면적(h0306_5), 가구원수(h0301_1)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윤주현 외(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제시된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기준과 분양면적 기준이 혼재¹²⁾되어 있다. 따라서 산출된 지표는 타 전수조사 자료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text{1인당주거면적} = \frac{\text{가구전용면적}}{\text{가구원수}} \times 100$$

12)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주거면적은 주거유형에 따라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¹⁴⁾ 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김혜승, 2007:20)¹⁵⁾.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구조·성능·환경기준의 경우 관련요소의 법정기준 적합여부를 가구별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자연재해의 위험과 주택상태(내열·내화·방열·방습) 및 환경(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을 실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추정 시 엄밀히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김혜승, 2007: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한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시설기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설비가 각 세부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침실기준과 면적기준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공고문(〈표 4-2〉 참조)을 바탕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는 해당가구원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주거면적과 방수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주거상황이 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건교부가 제시한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과 방수는 다음 표와 같다.

14) 건설교통부는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5) 김혜승(2007),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국토연구원.

〈표 4-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가구구성 ¹⁾	실(방)구성 ²⁾	총 주거면적(m ²)
1	1인 가구	1K	12(3.6평)
2	부부	1DK	20(6.1평)
3	부부+자녀1	2DK	29(8.8평)
4	부부+자녀2	3DK	37(11.2평)
5	부부+자녀3	3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14.8평)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시설·침실·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1차, 2차, 3차년도에서 시설기준 미달여부는 주거시설 사용형태_부엌($2 \leq h0106_22$ or $h0206_22$ or $h0305_22 \leq 5$), 주거시설 사용형태_화장실($2 \leq h0106_23$ or $h0206_23$ or $h0306_23 \leq 5$), 주거시설 사용형태_목욕시설($3 \leq h0106_24$ or $h0206_24$ or $h0306_24 \leq 5$) 중 하나라도 미달인 가구는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하였다. 침실 기준은 방수($h0106_4$ or $h0206_4$ or $h0306_4$)와 가구원수($h0101_1$ or $h0201_1$ or $h0301_1$) 변수를 사용하여 〈표 4-2〉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방수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면적 기준은 주거면적 ($h0106_5$ or $h0206_5$ or $h0306_5$)과 가구원수($h0101_1$ or $h0201_1$ or $h0301_1$) 변수를 사용하여 〈표 4-2〉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총 주거면적 기준에서 미달인 가구를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침실·면적기준에서는 표준가구구성에 따른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고려하였다¹⁶⁾.

2.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가.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2005년 53.53%, 2006년 54.88%, 2007년 54.35%로 나타났다. 2006년, 2007년의 자가 점유율은 2005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점유형태별 가구비율

(단위: %)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기타	계
2005	53.53	19.45	15.91	2.30	8.80	100.00
2006	54.88	19.25	15.40	2.46	8.01	100.00
2007	54.35	18.85	15.66	2.29	8.85	100.00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자가 점유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에서 2005년 66.39%, 2006년 69.39%, 2007년 6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 지역의 자가 점유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지역별 자가 점유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53.53	51.10	53.89	66.39
2006	54.88	52.17	55.07	69.39
2007	54.35	51.79	54.34	67.61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16) 예컨대, 3인 가구는 표준가구구성상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단순히 3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2분위에서 45.90%, 2006년과 2007년에는 1분위에서 47.30%, 46.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2005년 4분위 59.42%, 5분위 59.37%로 높게 나타났고, 2006년에도 4분위 60.88%, 5분위 63.78%로 높은 자가 점유율을 나타냈다.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높은 자가 점유율은 2007년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 소득 5분위별 자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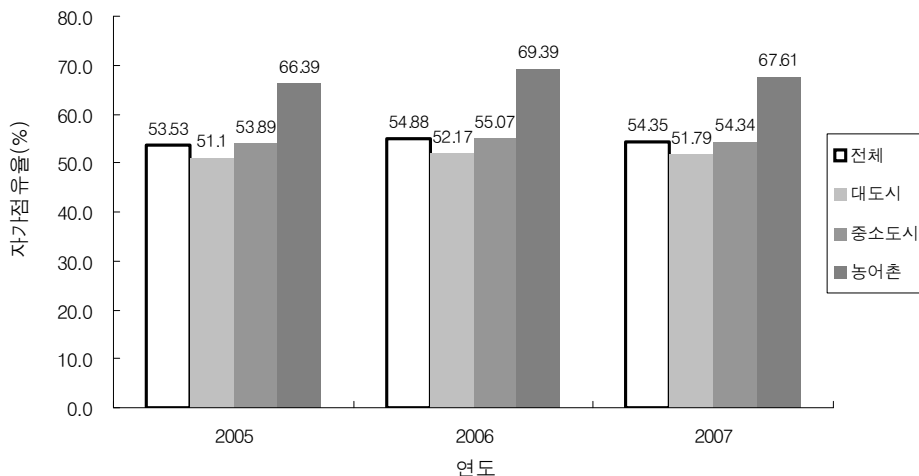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53.53	46.89	45.90	56.08	59.42	59.37
2006	54.88	47.30	48.42	53.97	60.88	63.78
2007	54.35	46.69	48.37	55.12	58.79	62.80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자가 점유율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지역별 자가 점유율



나.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전국적으로 2005년 평균 30.07㎡, 2006년 평균 32.42㎡, 2007년 32.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주거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1인당 주거면적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평균	30.07	29.19	30.50	33.05
	표준오차	0.22	0.31	0.40	0.49
2006	평균	32.42	31.15	33.06	36.20
	표준오차	0.86	1.13	1.61	2.31
2007	평균	32.21	31.62	36.16	37.92
	표준오차	1.13	1.21	2.44	2.4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로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분위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 비율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¹⁷⁾으로 보인다.

〈표 4-7〉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면적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평균	30.07	34.66	26.78	27.21	29.09	32.62
	표준오차	0.22	0.43	0.52	0.46	0.49	0.57
2006	평균	32.42	37.77	31.37	27.75	31.12	34.05
	표준오차	0.86	2.17	2.34	1.16	1.59	1.56
2007	평균	34.21	44.12	30.07	29.37	31.81	35.69
	표준오차	1.13	3.47	1.14	1.35	3.03	2.11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17) 예컨대, 2007년의 경우 1분위에 속한 1~2인 가구의 비율은 약 77%로 타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1인 가구 40.55%, 2인 가구 36.54%).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기타¹⁸⁾’를 제외하고 ‘자가’인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세’인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도별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표 4-8〉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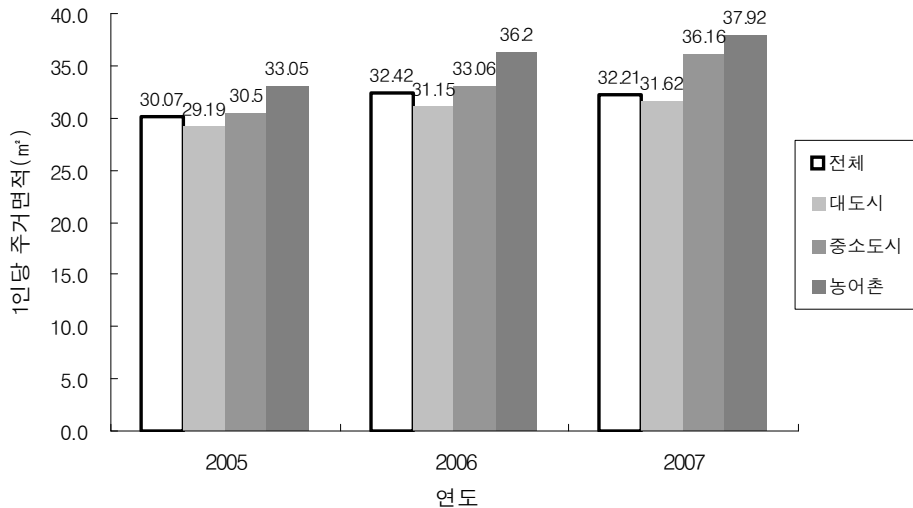
(단위: m²)

		전체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2005	평균	30.07	32.89	25.96	24.79	19.52	34.36
	표준오차	0.22	0.30	0.43	0.56	0.96	0.77
2006	평균	32.42	35.30	28.24	27.45	17.94	36.69
	표준오차	0.86	1.14	1.51	3.13	0.80	2.43
2007	평균	34.21	38.19	29.22	25.08	21.35	39.86
	표준오차	1.13	1.94	1.77	1.10	1.04	2.34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18)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주거 점유형태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으로 주택에 사는 경우, 둘째, 주택 명목이 가구원이 아닌 자로 된 경우,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사택이나 관사에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체적으로 2005년 0.80%, 2006년 0.92%, 2007년 0.91%로 나타났다. 2005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3인 가구 1.86%, 4인 가구 1.26%, 5인 가구 0.36%로 나타났다. 2006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3인 가구 2.20%, 4인 가구 1.31%, 5인 가구 0.66%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3인 가구 2.48%, 4인 가구 1.02%, 5인 가구 1.21%로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나타났다.

〈표 4-9〉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단위: %)

	전체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05	0.80	1.86	1.26	0.36
2006	0.92	2.20	1.31	0.66
2007	0.91	2.48	1.02	1.21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에서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2005년에 0.95%, 2006년에 1.18%, 2007년에 1.28%로 대도시, 농어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의 경우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지역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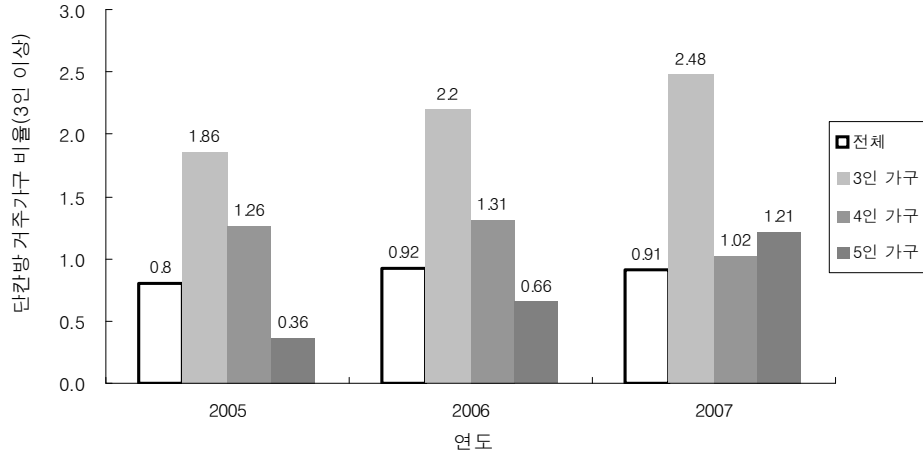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0.80	0.67	0.95	0.75
2006	0.92	0.68	1.18	0.83
2007	0.91	0.60	1.28	0.72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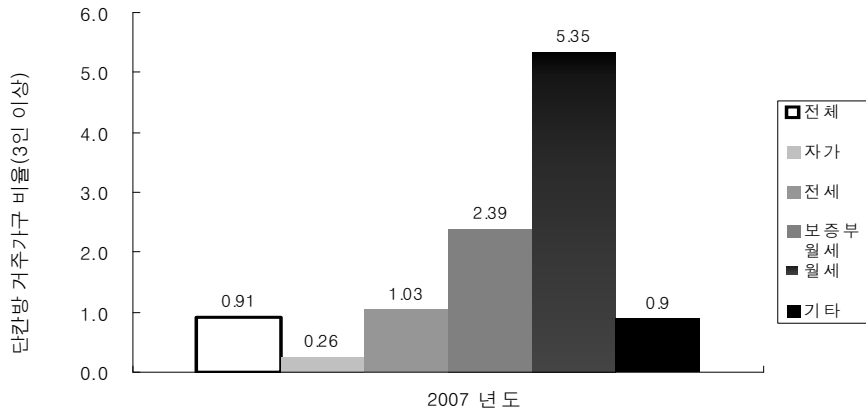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가구원수별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3인 이상)



다음으로 3인 이상 가구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점유형태별로 살펴 보면, 보증부 월세 및 월세가구에서 3인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월세가구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월세 가구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원자료.

라.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 R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체적으로 2005년 17.01%, 2006년 17.86%, 2007년 15.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중소도시가 17.14%로 가장 높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대도시가 21.82%, 1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은 2005년 15.09%, 2006년 12.40%, 2007년 10.35%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농어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지역별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7.01	17.00	17.14	15.09
2006	17.86	21.82	13.72	12.40
2007	15.56	18.42	12.72	10.35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살펴보면 1분위에서 2005년 33.51%, 2006년 39.17%, 2007년 3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5분위에서는 2005년 7.88%, 2006년 6.45%, 2007년 4.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소득 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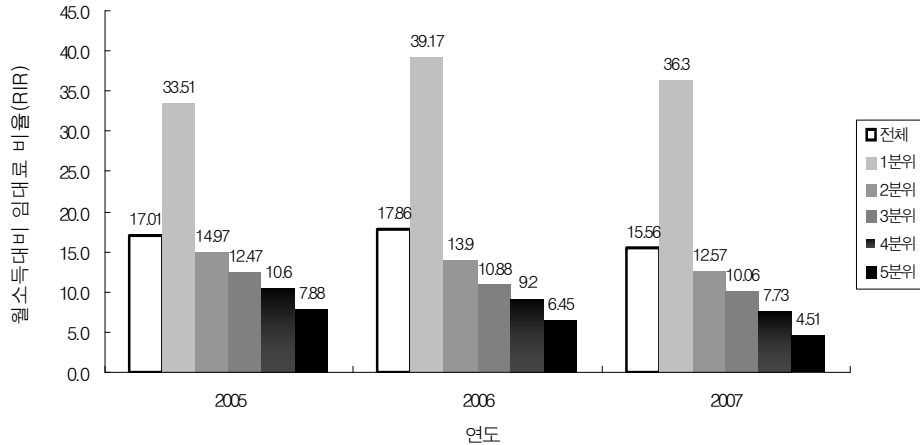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17.01	33.51	14.97	12.47	10.60	7.88
2006	17.86	39.17	13.90	10.88	9.20	6.45
2007	15.56	36.30	12.57	10.06	7.73	4.51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소득5분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실태는 분위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을 보여주는 <표 4-13>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¹⁹⁾. <표 4-13>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라고 가정하고,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3>에 따르면 2007년에 보증부 월세 및 월세로 사는 세입자 중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에서는 23.3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4,5분위에서는 1.03%, 0.00%로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낮은 반면,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²⁰⁾.

19) 미 주택 도시 개발청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는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30% 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부담"(excess cost burden)으로 정의하며,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50% 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심각한 주거비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정의하고 있다(오동훈(1997), "Housing Affordability and Urban Renters' Characteristics: A Budget Share Approach", 「국토계획」 제32권 제 5호.).

20) 이 결과는 주거 점유형태가 ‘보증부 월세’ 혹은 ‘월세’인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이기에 ‘보증부 월세’, ‘월세’ 및 ‘전세’인 가구는 월세로 환산하여 포함한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4-13〉 소득 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2007	6.75	93.25	23.33	76.67	3.30	96.70	2.15	97.85	1.03	98.97	0.00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이 17.11%로 높게 나타난 반면 6~7인 가구는 0.00%로 소득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가구원수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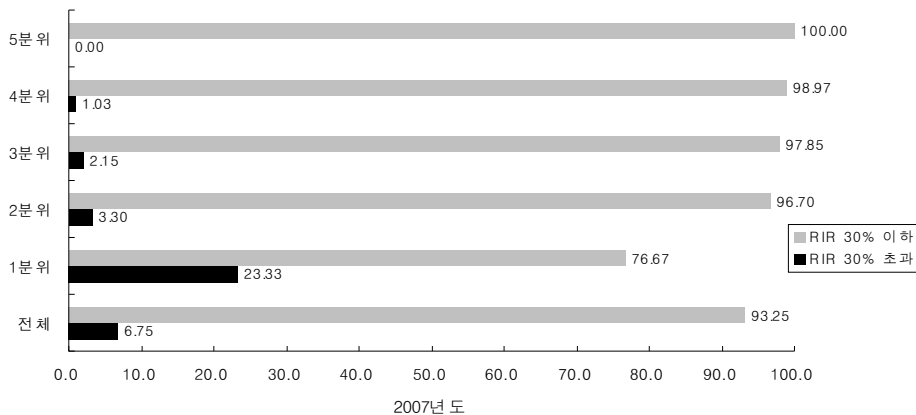
(단위: %)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RIR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30% 이하	30% 초과	
2007	6.71	93.29	17.11	82.89	4.19	95.81	1.11	98.89	3.41	96.59	1.11	98.89	0.00	100.00	0.00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소득계층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 소득5분위별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원자료.

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9.47%, 2006년 20.04%, 2007년 17.56%로 나타났다. 미달요건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에서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7.94%, 2006년 8.37%, 2007년 6.1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1.44%, 2006년 11.58%, 2007년 11.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005년 3.22%, 2006년 3.18%, 2007년 2.71%로 시설기준 미달가구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침실기준 미달가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순으로 나타났다²¹⁾.

〈표 4-1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

(단위: 천 가구, %)

연도	미달요건 구성요소	시설 기준	침실 기준	면적 기준	시설&침실 기준	시설&면적 기준	침실&면적 기준	시설&침실 &면적기준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계
		2005	규모	1,259	1,812	511	95	170	283
	비율	7.94	11.44	3.22	0.60	1.07	1.79	0.32	19.47
2006	규모	1,349	1,866	513	101	181	269	52	3,229
	비율	8.37	11.58	3.18	0.63	1.12	1.67	0.32	20.04
2007	규모	1,008	1,843	443	91	132	238	42	2,875
	비율	6.16	11.26	2.71	0.56	0.81	1.46	0.26	1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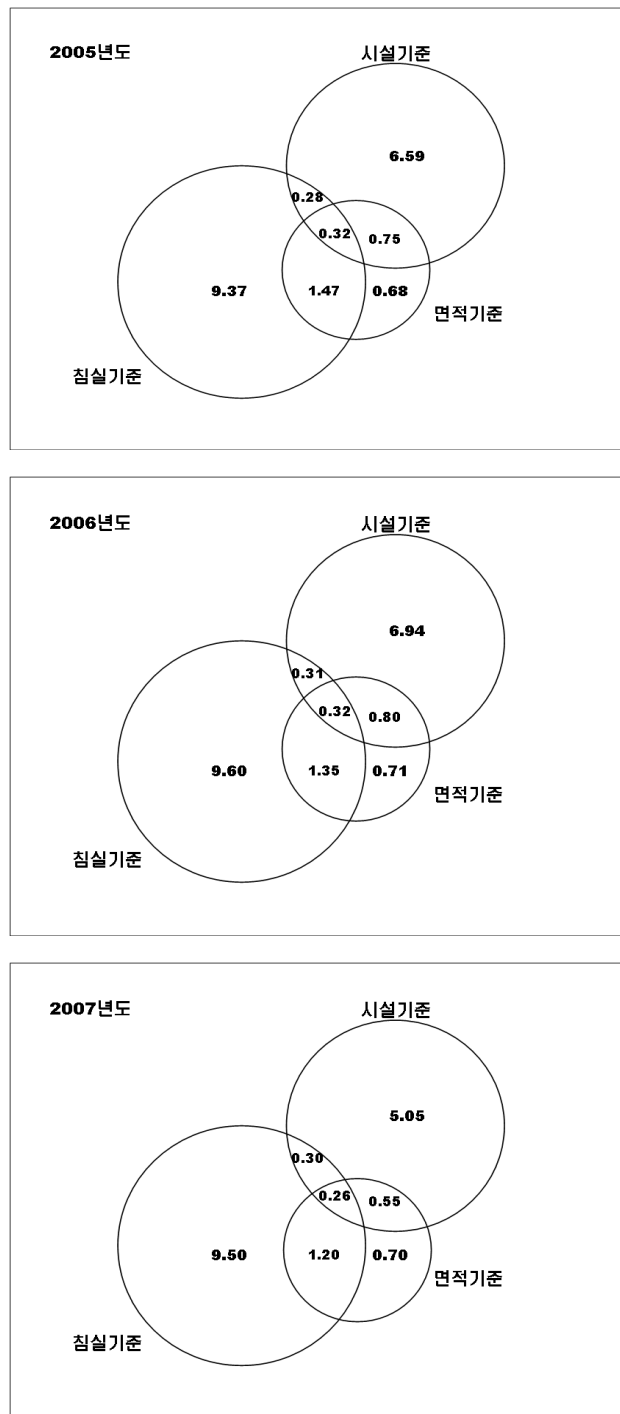
주: 구성요소 합계와 우측 끝 총계 사이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21) 이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로 김혜승(2007)과 윤주현 외(2005)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침실기준 미달가구 추정 시 개별가구의 사용방수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승(2007)과 윤주현 외(2005)의 경우 침실, 침실 이외의 방, 거실, 식당까지 모두 다 포함하여 방수를 계산했다. 반면 본 분석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침실과 침실 이외의 방을 제외한 거실, 식당은 조사시점에서 침실로 사용한 경우만을 방수로 계산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2005, 2006, 2007년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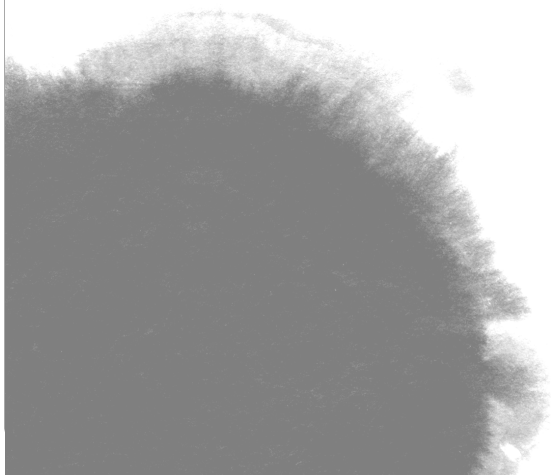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지역별·계층별·점유형태별 주거복지 실태와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주거안정성 뿐만 아니라 주거 쾌적성과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세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 가구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는 주거급여의 대상범위를 저소득 임차 가구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주요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택개량에 좀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주거복지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계층 및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05

보건의료



제5장 보건의료

이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3차년도 자료로써 분석 가능한 보건의료지표를 선정하여, 해당지표와 관련된 변수값의 연도별 추이를 소득분위²²⁾별·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최고 건강수준집단과 최저 건강수준집단을 짝 비교(paired comparison)하여 절대차이(AD, absolute difference)와 상대차이(RD, relative difference)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다²³⁾.

1.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보건의료와 관련된 측정지표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²⁴⁾. 측정지표는 대분류로서 건강수준, 건강형태 및 위험요인, 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건강수준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 건강형태 및 위험요인 영역에서 흡연과 음주에서의 지표가 KOWEPS 자료로 분석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흡연,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중심으로 소득분위별·지역별·성별로 나누어 3개년도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2) 소득분위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5분위로 구분하였다.

23) 건강불평등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총불평등 측정도구, 사회집단 간 불평등 측정도구, 인구집단에 대한 영향 측정도구, 평균 불비례 정도 측정도구 등 다양하다. 이 중 어떤 측정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 목적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집단 간 건강수준이 KOWEPS가 구축된 3개년도 사이에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본 절의 1차적 목적이므로, 여기에서는 건강수준의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짝 비교를 통해 절대차이(AD) 및 상대차이(RD) 지표를 산출할 것이다.

24)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형평성 측정방법론』, 2007.

〈표 5-1〉 건강 형평성 지표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분석 가능 여부	대분류	중분류	분석 가능 여부	
건강 수준	기대여명(life expectancy)	X	건강 수준	혈압	X	
	건강여명(health expectancy)	X		비만	X	
	총사망(all-cause mortality)	X		B형 간염	X	
	암 발생률, 암 생존율	X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X	
	주관적 건강상태	O	건강행태 및 위험요인	흡연	O	
	우울증	O		식생활	X	
	자살	X		음주	O	
	손상	X		신체활동	X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X		모유수유(breastfeeding)	X	
	활동제한 및 장애	X		자궁경부암 검진	X	
	치매	X		예방접종	X	
	저체중아 출산등	X		의료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X
	구강건강	X			보건의료제원	X
	결핵	X				

측정도구인 짝 비교는 두 집단 간의 건강 불평등 크기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여기에는 절대차이(AD)와 상대차이(RD) 지표가 있다. 먼저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r_1 과 r_2 는 두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 수준이다.

$$AD = r_1 - r_2 \quad (r_2: \text{기준집단 또는 가장 건강한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수준})$$

$$RD = r_1 / r_2 \quad (r_2: \text{기준집단 또는 가장 건강한 하위 사회집단의 건강수준})$$

절대차이는 r_1 , r_2 와 같은 단위로 표시되며, ‘범위(range)’라는 통계량으로 이해된다. 반면 상대차이는 단위가 없는 비율 비(rate ratio)이다.

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의 경우 해당변수를 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주관적 건강상태점수} &= \text{Mean}(5 - h01_{med2}) \text{ 또는 } \text{Mean}(5 - h02_{med2}) \\ &\text{또는 } \text{Mean}(5 - h03_{med2}) \end{aligned}$$

나.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우울증(Depression)은 각 년도 조사시점(2006년 11월 1일~12월 31일, 2007년 4월 24일~7월 20일, 2008년 4월 13일~6월 10일) 전 1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우울감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11문항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²⁵⁾의 경우 해당변수를 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25)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감 척도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척도는 0~3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우울증 판별을 위한 분할 점수(cutoff point)는 16점이다. 그런데 복지패널조사표 문항에는 1~4점 척도, 11문항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1~4점에 걸친 변수값을 0~3점으로 처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p0105_10, p0205_10)와 불만없이 생활했다(p0105_15, p0205_15))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또한 총점에 20/11을 곱한 것은, 11문항의 총점(33점)을 20문항일 때의 총점(60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begin{aligned}
 \text{1차년도 우울점수} &= [(p0105_9 - 1) + (4 - p0105_{10}) + (p0105_{11} - 1) + (p0105_{12} - 1) \\
 &+ (p0105_{13} - 1) + (p0105_{14} - 1) + (4 - p0105_{15}) + (p0105_{16} - 1) + (p0105_{17} - 1) \\
 &+ (p0105_{18} - 1) + (p0105_{19} - 1)] \times \frac{20}{11}
 \end{aligned}$$

$$\begin{aligned}
 \text{2차년도 우울점수} &= [(p0205_9 - 1) + (4 - p0205_{10}) + (p0205_{11} - 1) + (p0205_{12} - 1) \\
 &+ (p0205_{13} - 1) + (p0205_{14} - 1) + (4 - p0205_{15}) + (p0205_{16} - 1) + (p0205_{17} - 1) \\
 &+ (p0205_{18} - 1) + (p0205_{19} - 1)] \times \frac{20}{11}
 \end{aligned}$$

$$\begin{aligned}
 \text{3차년도 우울점수} &= [(p0305_9 - 1) + (4 - p0305_{10}) + (p0305_{11} - 1) + (p0305_{12} - 1) \\
 &+ (p0305_{13} - 1) + (p0305_{14} - 1) + (4 - p0305_{15}) + (p0305_{16} - 1) + (p0305_{17} - 1) \\
 &+ (p0305_{18} - 1) + (p0305_{19} - 1)] \times \frac{20}{11}
 \end{aligned}$$

또한 우울증을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를 알 수 있는 표준화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은 1차년도 자료의 경우 0.85, 2차년도 자료의 경우 0.84, 3차년도 자료의 경우 0.83으로 나타나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²⁶⁾되었다.

다.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1) 흡연율

흡연율(Smoking rate)은 1,2차는 조사시점의 전년도 1년간 평균적인 흡연량을 5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²⁷⁾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고, 3차는 조사시점이 조사일 현재로 변경되고, 문항도 1,2차에 조사한 것과 연계성이 있게 2개의 문항²⁸⁾을 합쳐서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흡연율은 통상적인 국제비교에서 15세 이상 남녀인구의 흡연자 비율을 말한

26)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27)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흡연을 얼마나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하루에 반갑 이내”면 1, “하루에 한갑 이내”면 2, “하루에 두갑 이내”면 3, “하루에 두갑 이상”이면 4, “전혀 흡연하지 않는다”면 5로 응답하는 문항임.

28)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라는 질문임.”

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20세 이상 남녀인구의 흡연자 비율을 통계치로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2008 국제통계연감, p479). 따라서 통계청과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인구에서의 흡연율을 구하였다.

변수처리의 경우 1,2차는 해당변수에 1~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흡연, 5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으로 구분하여 흡연여부를 더미처리하였고 3차는 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1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흡연, 2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흡연으로 1,2차와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흡연율} = \frac{\text{흡연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quad (1 \leq p0105_1 \text{ 또는 } p0205_1 \leq 4 \text{ 또는 } p0305_{aq5} = 1 \text{ 이면 흡연})$$

2) 간접흡연율

간접흡연율(Smoking rate)은 3차 조사시점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시간을 조사한 문항²⁹⁾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수처리의 경우 2~3으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 1로 응답한 경우는 간접흡연이 없는걸로 구분하여 간접흡연여부를 더미처리하였고 그 산식은 흡연율과 같다.

$$\text{간접흡연율} = \frac{\text{흡연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quad (2 \leq p0305_{3aq9} \leq 3 \text{ 이면 흡연})$$

라.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산출방식

음주율은 조사시점의 전년도 1년간 평균적인 음주횟수를 4점 척도로 조사한 문항³⁰⁾을 통해 가구주, 가구원 전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주하는 경우 평균 음주량(음주시 마시는 술잔 횟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

29)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시간(없음)”이면 1, “1시간 미만”이면 2, “1시간 이상”이면 3로 응답하는 문항임.

30) “1년간 평균적으로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 1회 이하”면 1, “주 2~3회”면 2, “주 4회 이상”이면 3,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4로 응답하는 문항임.

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음주율 또한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통계청과 비교를 위해 20세 이상 인구에서의 음주율을 구하였다.

변수처리의 경우 해당변수에 1~3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음주, 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비음주로 구분하여 음주여부를 더미처리하였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음주율} = \frac{\text{음주인구}}{\text{20세이상인구}} \times 100$$

(1 ≤ p0105_2 또는 p0205_2 또는 p0305_2 ≤ 3이면 음주)

2.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가. 주관적 건강상태

첫째,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5년 평균 2.55점(4점 만점), 2006년 평균 2.43점, 2007년 평균 2.41점이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1.73점, 2.51점, 2.81점, 2.96점, 3.07점이었다. 2006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1.75점, 2.44점, 2.68점, 2.76점, 2.84점이었다. 2007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1.86점, 2.46점, 2.76점, 2.86점, 2.92점이었다. 이처럼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7년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0.08점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분위별로도 2006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에 비해 1분위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평균	2.55	1.73	2.51	2.81	2.96	3.07
	표준오차	0.01	0.02	0.03	0.03	0.03	0.03
2006	평균	2.43	1.75	2.44	2.68	2.76	2.84
	표준오차	0.01	0.02	0.03	0.03	0.03	0.03
2007	평균	2.51	1.86	2.46	2.76	2.86	2.92
	표준오차	0.01	0.02	0.03	0.03	0.03	0.03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전체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5년 평균 2.80점(4점 만점), 2006년 평균 2.68점, 2007년 평균 2.73점이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2.12점, 2.75점, 2.91점, 3.07점, 5분위 3.13점이었다. 2006년, 2007년의 경우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건강상태 점수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0.0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0.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도 2006년에 비해 모든 분위에서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에 비해 1분위를 뺀 나머지 분위에서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소득5분위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평균	2.80	2.12	2.75	2.91	3.07	3.13
	표준오차	0.01	0.02	0.02	0.02	0.02	0.02
2006	평균	2.68	2.09	2.66	2.80	2.91	2.94
	표준오차	0.01	0.02	0.02	0.02	0.02	0.02
2007	평균	2.73	2.18	2.68	2.88	2.94	2.98
	표준오차	0.01	0.02	0.02	0.02	0.02	0.02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둘째,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2005년 2.58점, 2.60점, 2.11점이었다. 2006년의 경우 2.43점, 2.48점, 2.16점이었고, 2007년의 경우 2.50점, 2.58점, 2.18점이었다. 이처럼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7년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2006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비해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평균	2.55	2.58	2.60	2.11
	표준오차	0.01	0.02	0.02	0.03
2006	평균	2.43	2.43	2.48	2.16
	표준오차	0.01	0.02	0.02	0.03
2007	평균	2.51	2.50	2.58	2.18
	표준오차	0.01	0.02	0.02	0.03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2005년 전체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2.83점, 2.82점, 2.44점이었다. 2006년의 경우 2.67점, 2.72점, 2.46점이었고, 2007년의 경우 2.73점, 2.78점, 2.47점이었다.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높은 순서대로 2005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 2006년과 2007년에는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7년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농어촌 지역의 점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은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해선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평균	2.80	2.83	2.82	2.44
	표준오차	0.01	0.01	0.01	0.02
2006	평균	2.68	2.67	2.72	2.46
	표준오차	0.01	0.01	0.01	0.02
2007	평균	2.73	2.73	2.78	2.47
	표준오차	0.01	0.01	0.01	0.02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셋째,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 여성 순으로 2005년 2.69점, 1.93점이었다. 2006년의 경우 2.57점, 1.84점이었고, 2007년의 경우 2.64점, 1.94점이었다. 이처럼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7년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2006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평균	2.55	2.69	1.93
	표준오차	0.01	0.02	0.03
2006	평균	2.43	2.57	1.84
	표준오차	0.01	0.01	0.03
2007	평균	2.51	2.64	1.94
	표준오차	0.01	0.01	0.03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인종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2005년 전체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성, 여성 순으로 2.89점, 2.71점이었다. 2006년의 경우 2.78점, 2.58점이었고, 2007년의 경우 2.82점, 2.65점이었다.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7년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해선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평균	2.80	2.89	2.71
	표준오차	0.01	0.01	0.01
2006	평균	2.68	2.78	2.58
	표준오차	0.01	0.01	0.01
2007	평균	2.73	2.82	2.65
	표준오차	0.01	0.01	0.01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와 같이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할 때 2007년에는 지역집단 간 차이는 2005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에 비해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와 소득분위집단 간 차이는 다소 개선된 추세로 나타났다.

〈표 5-8〉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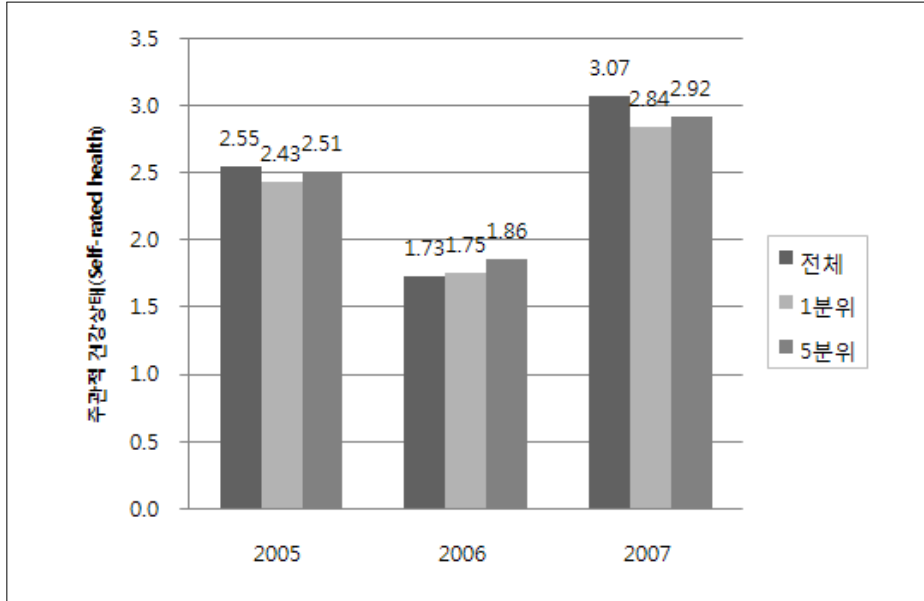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1.34	0.56	-0.49	0.81	-0.76	0.72	-1.01	0.68	-0.39	0.86	-0.18	0.94
2006	-1.09	0.62	-0.32	0.87	-0.73	0.72	-0.85	0.71	-0.26	0.90	-0.20	0.93
2007	-1.06	0.64	-0.40	0.84	-0.70	0.73	-0.80	0.73	-0.31	0.89	-0.17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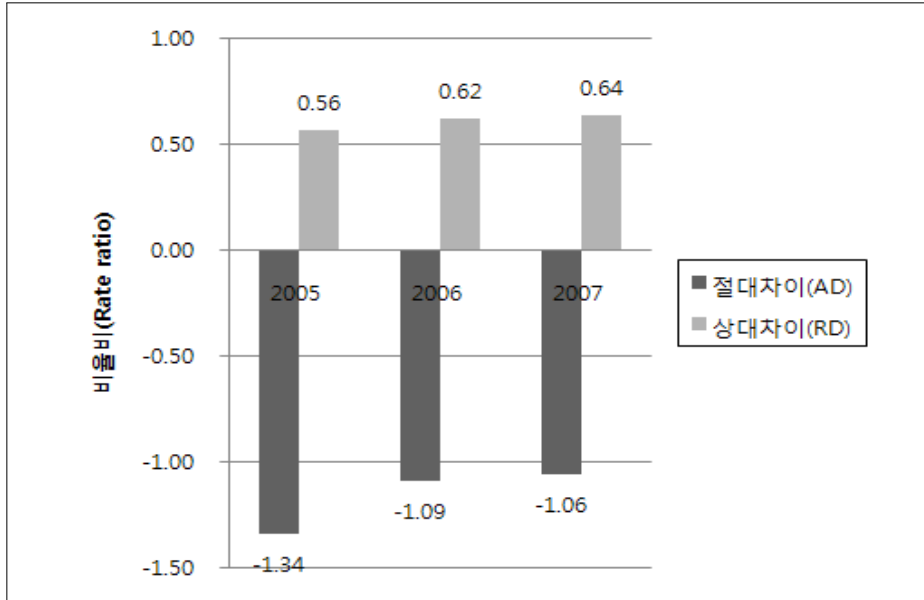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경우 소득분위집단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추이, 절대차이 및 상대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그림 5-2]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나.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첫째, 소득5분위별 우울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2006년 평균 9.33점(60점 만점), 2007년 평균 8.76점, 2008년 평균 8.09점이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15.55점, 9.54점, 7.53점, 6.51점, 5.15점이었다. 2007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14.27점, 8.86점, 7.17점, 5.98점, 5.10점이었다. 2008년의 경우 1분위~5분위 순으로 12.85점, 8.55점, 6.11점, 5.72점, 4.90점이었다. 이처럼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1분위의 우울점수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우울증 판별점수인 16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위계층에 비해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8년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2007년,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0.67점, 1.24점 감소하였고, 소득분위별로도 모든 분위에서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5-9〉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평균	9.33	15.55	9.54	7.53	6.51	5.15
	표준오차	0.13	0.24	0.27	0.27	0.25	0.24
2007	평균	8.76	14.27	8.86	7.17	5.98	5.10
	표준오차	0.13	0.24	0.27	0.27	0.26	0.26
2008	평균	8.09	12.85	8.55	6.11	5.72	4.90
	표준오차	0.12	0.22	0.27	0.25	0.24	0.25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전체 가구원의 우울점수는 2006년 평균 6.06점(60점 만점), 2007년 평균 5.74점, 2008년 평균 5.26점이었다. 가구원의 우울점수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8년의 우울 점수는 2007년,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0.48점, 0.80점 감소하였고, 분위별로도 5분위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5-10〉 소득 5분위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6	평균	6.06	10.87	6.16	5.06	4.51	3.70
	표준오차	0.07	0.16	0.16	0.15	0.15	0.14
2007	평균	5.74	10.18	5.79	4.72	4.23	3.77
	표준오차	0.07	0.17	0.16	0.15	0.15	0.15
2008	평균	5.26	9.32	5.48	4.04	3.95	3.50
	표준오차	0.07	0.16	0.15	0.14	0.15	0.14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항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둘째, 지역별 우울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2008년의 경우 대도시 8.27점, 중소도시 7.64점, 농어촌 9.52점이었다. 2007년의 경우 각각 8.86점, 8.36점, 10.41점이었다. 마지막으로 2006년의 경우 각각 9.41점, 9.12점, 10.02점이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농어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2008년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2006년, 2007년에 비해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5-11〉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	평균	9.33	9.41	9.12	10.02
	표준오차	0.13	0.18	0.21	0.31
2007	평균	8.76	8.86	8.36	10.41
	표준오차	0.13	0.19	0.22	0.29
2008	평균	8.09	8.27	7.64	9.52
	표준오차	0.12	0.18	0.20	0.26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전체 가구원의 우울점수는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 가구원의 우울점수는 2006년, 2007년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은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농어촌 지역의 우울점수는 2007년에는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지역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	평균	6.06	6.20	5.82	6.63
	표준오차	0.07	0.10	0.12	0.19
2007	평균	5.74	5.97	5.26	7.26
	표준오차	0.07	0.11	0.12	0.18
2008	평균	5.26	5.42	4.89	6.50
	표준오차	0.07	0.10	0.12	0.17

주: 1) 극히 드물다=0점, 대부분 그렇다=3점.

2) 우울점수=11문항 총점*20/11한 값으로 최저 0점, 최고 6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함.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셋째, 성별 우울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2008년의 경우 남성 6.78점, 여성 13.77점이었다. 2007년의 경우 각각 7.35점, 14.95점이었다. 마지막으로 2006년의 경우 각각 7.88점, 15.91점이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우울점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5-13〉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주)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6	평균	9.33	7.88	15.91
	표준오차	0.13	0.13	0.31
2007	평균	8.76	7.35	14.95
	표준오차	0.13	0.13	0.30
2008	평균	8.09	6.78	13.77
	표준오차	0.12	0.12	0.27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인종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전체 가구원의 우울점수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5-14〉 성별 우울에 대한 인식(가구원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6	평균	6.06	4.95	7.10
	표준오차	0.07	0.10	0.11
2007	평균	5.74	4.57	6.83
	표준오차	0.07	0.10	0.11
2008	평균	5.26	4.30	6.16
	표준오차	0.07	0.09	0.10

주: 점수는 건강이 아주 인종다(0점)~아주 건강하다(4점)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와 같이 소득분위집단 간 우울점수의 절대차이, 상대차이는 2008년과 비교할 때 2007년, 2006년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집단 간 우울점수의 절대차이, 상대차이는 2007년에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간 우울점수의 절대차이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차이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우울에서의 보건의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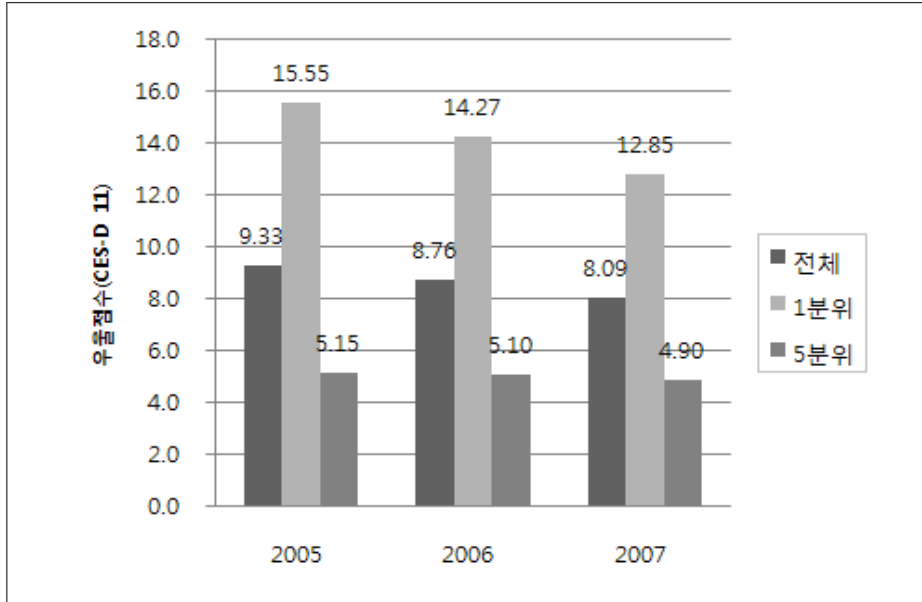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6	10.40	3.02	0.90	1.10	-8.03	0.50	7.17	2.94	0.81	1.14	-2.15	0.70
2007	9.17	2.80	2.05	1.25	-7.60	0.49	6.41	2.70	2.00	1.38	-2.26	0.67
2008	7.95	2.62	1.88	1.25	-6.99	0.49	5.82	2.66	1.61	1.33	-1.86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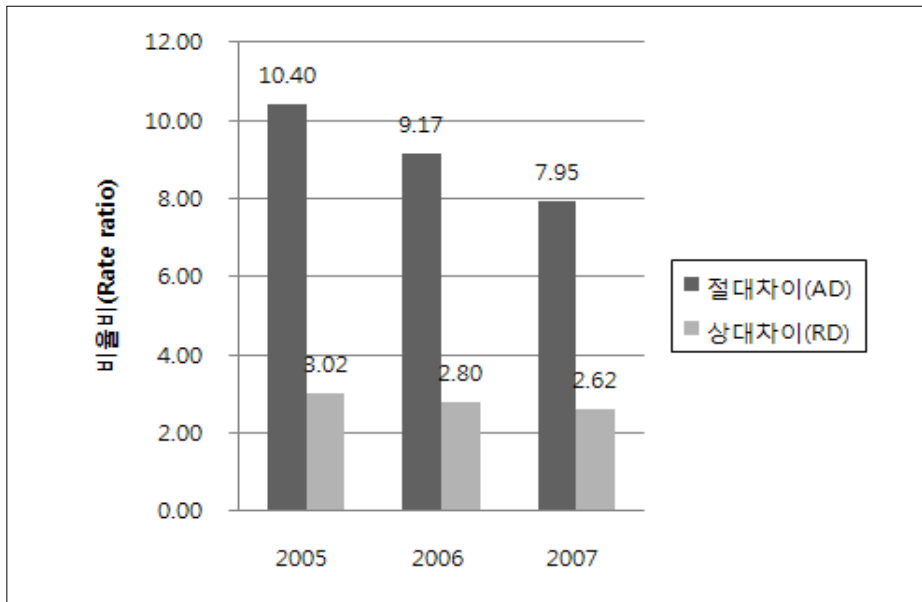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경우 소득분위집단 간 우울점수의 추이, 절대차이 및 상대차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3] 우울에 대한 인식(우울점수):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그림 5-4] 우울증에서의 보건의료지표: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다.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1) 흡연

첫째, 소득분위별 흡연율은 아래 표와 같다. 흡연율은 가구주의 경우 2005년 42.89%, 2006년 41.80%, 2008년 39.93%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인구 중 하루에 한 갑 이내 흡연하는 비율이 2005년, 2006년과 2008년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흡연율은 2005년, 200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흡연자 중 하루 한갑 이내 흡연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흡연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때,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3분위 흡연율은 약간 증가하였고, 1분위, 4분위, 5분위에서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42.89	32.99	45.89	46.20	47.83	45.2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35	44.52	29.83	31.03	35.69	35.81	
		하루 한갑 이내	53.90	46.66	57.48	58.30	54.50	52.46	
		하루 두갑 이내	9.45	7.43	11.16	9.23	9.38	10.02	
		하루 두갑 이상	1.30	1.39	1.53	1.44	0.43	1.71	
2006	비율	41.80	31.44	48.65	46.95	43.25	43.22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4	40.43	30.83	27.75	32.73	35.45	
		하루 한갑 이내	54.57	49.53	55.69	59.33	55.97	52.04	
		하루 두갑 이내	10.47	8.29	12.50	11.03	9.86	10.46	
		하루 두갑 이상	1.61	1.75	0.98	1.89	1.44	2.04	
2008	비율	39.93	29.39	45.33	47.31	42.67	39.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	39.99	30.26	29.43	32.14	31.02	
		하루 한갑 이내	54.79	49.24	56.81	56.11	55.89	55.69	
		하루 두갑 이내	21~30	7.57	5.73	7.01	10.32	6.75	7.81
			31~40	4.56	4.42	5.77	3.86	4.02	4.69
하루 두갑 이상	0.59	0.62	0.16	0.28	1.19	0.79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 2005년 25.25%, 2006년 25.57%, 2008년 24.47%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전체 흡연율과 흡연인구 중 흡연량 분포는 2008년 통계청 자료와 유사한 분포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흡연율도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때,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7〉 소득5분위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25.25	23.12	26.63	25.48	26.00	25.2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25	46.17	33.77	34.24	38.84	38.20	
		하루 한갑 이내	52.34	45.97	55.62	56.32	52.73	51.08	
		하루 두갑 이내	8.34	6.75	9.36	8.27	7.93	9.39	
		하루 두갑 이상	1.07	1.11	1.25	1.17	0.50	1.33	
2006	비율	25.57	23.01	28.69	26.66	24.55	25.4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56	42.11	33.99	31.81	34.01	40.88	
		하루 한갑 이내	52.17	48.87	53.61	56.18	53.32	48.86	
		하루 두갑 이내	9.54	7.38	11.19	10.01	10.28	8.74	
		하루 두갑 이상	1.74	1.64	1.21	2.01	2.40	1.51	
2008	비율	24.47	22.24	26.63	26.62	24.55	22.69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37	42.69	34.13	35.31	36.66	38.47	
		하루 한갑 이내	51.57	47.28	54.1	51.97	52.87	51.4	
		하루 두갑 이내	21~30	6.72	5.43	6.91	9.3	5.67	6.09
			31~40	3.79	4.03	4.73	3.07	3.74	3.39
하루 두갑 이상	0.54	0.57	0.12	0.34	1.06	0.66			
2008 (통계청)	비율	26.30	-	-	-	-	-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42.00	-	-	-	-	-	
		하루 한갑 이내	50.00	-	-	-	-	-	
		하루 두갑 이내	21~30	5.3	-	-	-	-	-
			31~40	2.4	-	-	-	-	-
하루 두갑 이상	0.30	-	-	-	-	-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분향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둘째, 지역별 흡연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2005년, 2006년과 2008년 모두 중 소도시 지역의 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8〉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42.89	42.17	44.71	36.96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35	37.13	33.36	36.53	
		하루 한갑 이내	53.90	52.72	55.70	49.85	
		하루 두갑 이내	9.45	8.72	9.80	12.18	
		하루 두갑 이상	1.30	1.43	1.13	1.44	
2006	비율	41.80	41.07	43.63	36.06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4	34.34	32.09	35.07	
		하루 한갑 이내	54.57	53.21	55.95	54.48	
		하루 두갑 이내	10.47	10.99	10.10	9.52	
		하루 두갑 이상	1.61	1.46	1.86	0.93	
2008	비율	39.93	38.53	42.18	35.56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	34.06	31.39	30.13	
		하루 한갑 이내	54.79	54.49	54.63	57.56	
		하루 두갑 이내	21~30	7.57	6.65	8.49	7.28
			31~40	4.56	4.13	4.96	4.62
		하루 두갑 이상	0.59	0.67	0.53	0.41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 전체의 경우 지역별 흡연율은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의 흡연율을 살펴볼 때,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가면서 가구주의 흡연율은 지역별로 모두 약간씩 감소했다. 하지만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의 흡연량은 하루 두갑 이내를 피는 비율이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지역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25.25	25.22	25.89	21.6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25	40.03	36.09	39.90	
		하루 한갑 이내	52.34	51.23	54.09	48.45	
		하루 두갑 이내	8.34	7.63	8.82	10.44	
		하루 두갑 이상	1.07	1.12	1.00	1.21	
2006	비율	25.57	25.48	26.22	22.3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56	37.99	34.68	39.01	
		하루 한갑 이내	52.17	50.98	53.58	51.11	
		하루 두갑 이내	9.54	9.72	9.45	8.80	
		하루 두갑 이상	1.74	1.31	2.29	1.08	
2008	비율	24.47	24.31	25.18	21.37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37	39.4	36.08	32.19	
		하루 한갑 이내	51.57	50.94	51.62	55.47	
		하루 두갑 이내	21~30	6.72	5.78	7.56	7.62
			31~40	3.79	3.2	4.31	4.38
		하루 두갑 이상	0.54	0.69	0.43	0.34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셋째, 성별 흡연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2005년, 2006년과 2008년 모두 남성이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볼 때 남성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흡연율은 2005년에서 2006년은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흡연량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 두갑 이내를 피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42.89	50.24	9.30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5.35	33.94	70.22	
		하루 한갑 이내	53.90	55.07	25.16	
		하루 두갑 이내	9.45	9.69	3.60	
		하루 두갑 이상	1.30	1.31	1.02	
2006	비율	41.80	48.91	10.3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3.34	32.11	59.05	
		하루 한갑 이내	54.57	55.48	35.59	
		하루 두갑 이내	10.47	10.74	4.88	
		하루 두갑 이상	1.61	1.66	0.48	
2008	비율	39.93	47.04	9.39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2.50	30.68	71.60	
		하루 한갑 이내	54.79	56.26	23.16	
		하루 두갑 이내	21~30	7.57	7.72	4.31
			31~40	4.56	4.73	0.92
		하루 두갑 이상	0.59	0.62	0.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원 전체의 경우 흡연율은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흡연율을 살펴볼 때, 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2006년에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전체의 흡연량은 두갑 이내를 피는 비율은 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성별 흡연율 및 흡연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25.25	50.46	2.93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8.25	36.10	71.07	
		하루 한갑 이내	52.34	54.25	23.16	
		하루 두갑 이내	8.34	8.55	5.26	
		하루 두갑 이상	1.07	1.11	0.52	
2006	비율	25.57	49.08	4.58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6.56	34.43	56.89	
		하루 한갑 이내	52.17	54.04	34.21	
		하루 두갑 이내	9.54	10.15	3.67	
		하루 두갑 이상	1.74	1.38	5.23	
2008	비율	24.47	47.94	3.45		
	흡연 =100	하루 반갑 이내	37.37	34.44	73.80	
		하루 한갑 이내	51.57	53.83	23.40	
		하루 두갑 이내	21~30	6.72	7.08	2.28
			31~40	3.79	4.06	0.53
		하루 두갑 이상	0.54	0.59	0.00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와 같이 가구주의 소득분위집단 간 흡연율의 절대차이, 상대차이는 2008년의 경우 2005년, 2006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집단 간 흡연율의 절대차이, 상대차이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집단과 성별 간 흡연율의 절대차이, 상대차이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14.84	1.45	7.75	1.21	40.94	5.40	3.51	1.15	4.22	1.19	47.53	17.22
2006	17.21	1.55	7.57	1.21	38.53	5.40	5.68	1.25	3.89	1.17	44.50	17.22
2008	17.92	1.61	6.62	1.19	37.65	5.01	4.39	1.20	3.81	1.18	44.49	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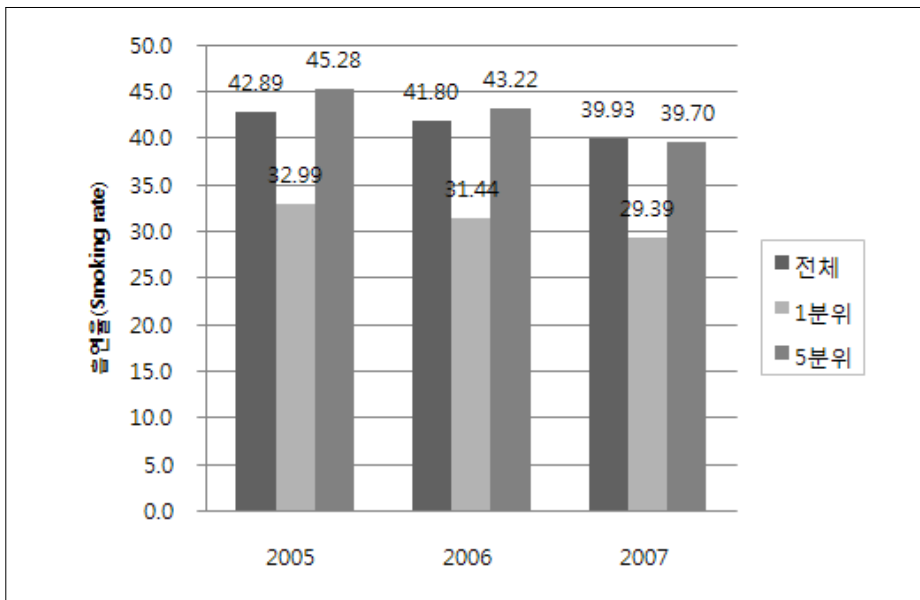
주: 1)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임.

2) 3차년도 자료의 조사시점이 변경되어 2007년은 누락되고, 보기문항을 변경.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경우 소득분위집단 간 흡연율의 추이, 절대차이 및 상대차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5] 흡연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그림 5-6] 흡연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2) 간접흡연

첫째, 소득분위별 간접흡연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간접흡연율은 가구주의 경우 2008년 49.50%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흡연인구 중 하루에 한 시간 미만 간접흡연하는 비율이 2008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간접흡연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때,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1분위의 간접흡연율이 다른 분위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23〉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비율	49.50	33.77	55.18	53.78	57.75	54.55	
	간접흡연 =100	하루 1시간 미만	64.35	69.57	59.47	66.28	61.8	65.45
		하루 1시간 이상	35.65	30.43	40.53	33.72	38.20	34.55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 2008년 간접흡연율은 42.18%로 나타났고, 소득분위별 간접흡연율을 또한 1분위가 다른 분위의 간접흡연율을 보다 낮게 나타냈다.

〈표 5-24〉 소득5분위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8	비율	42.18	33.58	46.5	45.16	43.42	43.17	
	간접흡연 =100	1시간 미만	69.05	70.73	68.04	71.59	65.23	69.87
		1시간 이상	30.95	29.27	31.96	28.41	34.77	30.13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둘째, 지역별 간접흡연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2008년 지역적으로 간접흡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도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흡연인구 중 하루에 한 시간 미만 간접흡연하는 비율은 농어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지역별 간접흡연율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	비율	49.5	49.66	52.04	35.18	
	간접흡연 =100	1시간 미만	64.35	63.19	63.84	77.37
		1시간 이상	35.65	36.81	36.16	22.63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 2008년 지역별 간접흡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인구 중 하루에 한 시간 미만 간접흡연하는 비율 또한 가구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5-26〉 지역별 간접흡연을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8	비율	42.18	42.57	43.44	32.73	
	간접흡연 =100	1시간 미만	69.05	68.25	68.83	76.84
		1시간 이상	30.95	31.75	31.17	23.16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셋째, 성별 흡연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2008년 남성의 간접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7〉 성별 간접흡연을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8	비율	49.50	54.76	27.46	
	간접흡연 =100	1시간 미만	64.35	63.73	69.56
		1시간 이상	35.65	36.27	30.44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 또한 가구주의 간접흡연율과 같게 남성의 간접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의 간접흡연인구 중 하루에 한 시간 미만 간접흡연하는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8〉 성별 간접흡연을 및 간접흡연 시간(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8	비율	42.18	55.56	30.47	
	간접흡연 =100	1시간 미만	69.05	64.82	75.79
		1시간 이상	30.95	35.18	24.21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와 같이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에서의 성별 간 간접흡연율의 절대차이, 상대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5-29〉 간접흡연에서의 보건의료지표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8	23.98	1.71	16.86	1.48	27.30	1.99	12.92	1.38	10.71	1.33	25.09	1.82

주: 20세 이상 인구 중 간접흡연율임.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라.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첫째,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음주율은 2005년 66.28%, 2006년 69.43%, 2007년 73.49%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볼 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음주율도 높게 나타났다. 음주횟수의 경우 주 1회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량의 경우 음주시 7~9잔 정도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의 경우 음주율은 2005년 52.10%, 2006년 58.98%, 2007년 64.81%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소득분위별로 볼 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음주율도 높게 나타났다. 음주횟수의 경우 주 1회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량의 경우 2005년 음주시 3~4잔 정도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6년 2007년은 음주시 1~2잔 정도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0〉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66.28	45.67	66.38	71.38	74.60	81.07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4.79	45.70	44.20	43.86	42.58	47.41
			주 2~3회	35.75	28.54	35.09	37.42	39.25	37.19
			주 4회 이상	19.46	25.76	20.71	18.71	18.17	15.40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13.29	25.75	12.42	10.19	10.21	9.91
			3~4잔 정도	20.02	23.04	23.11	21.04	18.16	15.97
			5~6잔 정도	16.97	13.44	17.09	17.60	18.55	17.60
			7~9잔 정도	26.27	20.60	24.96	28.87	26.04	29.67
			10잔 이상	23.45	17.17	22.42	22.31	27.04	26.85
	2006	비율		69.43	46.96	69.47	75.87	80.76	84.07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6.05	46.76	46.99	45.15	44.27	47.21
			주 2~3회	34.84	26.79	31.67	34.81	40.8	38.32
			주 4회 이상	19.10	26.45	21.34	20.04	14.92	14.47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16.14	28.2	15.23	12.52	11.52	14.85
			3~4잔 정도	19.90	23.18	21.25	19.16	16.92	19.64
			5~6잔 정도	14.25	12.37	15	14.63	12.49	16.47
			7~9잔 정도	27.05	21.43	29.71	29.58	31.97	22.39
			10잔 이상	22.66	14.81	18.81	24.11	27.1	26.65
2007		비율		73.49	52.18	73.54	79.82	84.9	87.38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7.19	48.14	47.62	45.41	45.02	49.7
			주 2~3회	34.41	27.5	32.37	36.98	38.01	36.51
			주 4회 이상	18.4	24.36	20	17.62	16.97	13.79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17.49	29.33	17.69	14.86	11.23	15.3
			3~4잔 정도	20.37	22.73	22.13	18.31	19.82	19.14
			5~6잔 정도	12.26	9.32	12.45	12.04	12.13	15.02
			7~9잔 정도	26.63	22.15	25.72	31.06	28.74	25.3
			10잔 이상	23.25	16.46	22.01	23.74	28.08	25.24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5-31〉 소득5분위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비율		52.10	37.71	50.90	55.74	58.28	59.03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57.75	55.24	56.56	57.24	58.99	59.69
			주 2~3회	28.94	25.15	28.65	29.98	29.91	29.86
			주 4회 이상	13.31	19.61	14.80	12.78	11.10	10.45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21.84	29.07	20.16	21.22	19.94	20.68
			3~4잔 정도	23.85	24.47	25.53	25.04	23.26	21.54
			5~6잔 정도	15.51	12.95	14.96	15.56	17.05	16.15
			7~9잔 정도	20.88	18.32	20.99	22.31	19.84	22.24
			10잔 이상	17.92	15.18	18.36	15.87	19.92	19.38
	2006	비율		58.95	41.2	57.94	64.68	66.45	66.19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59.6	56.14	59.96	60.28	59.92	60.7
			주 2~3회	27.78	23.85	26.22	26.91	30.43	29.83
			주 4회 이상	12.62	20.02	13.82	12.81	9.65	9.47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27.38	32.81	27.98	26.19	25.93	25.81
			3~4잔 정도	22.57	24.85	22.61	23.38	20.5	22.32
			5~6잔 정도	12.62	11.75	12.88	12.24	12.16	13.78
			7~9잔 정도	20.77	18.23	22.17	21.45	22.51	19
			10잔 이상	16.66	12.36	14.36	16.73	18.9	19.09
2007		비율		64.81	47.17	62.19	70.13	72.98	73.2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61.27	58.71	60.97	60.24	60.11	65.27
			주 2~3회	26.84	23.51	25.67	28.68	29.23	26.15
			주 4회 이상	11.89	17.77	13.37	11.08	10.66	8.58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29.83	37.57	30.33	26.33	26.53	30.41
			3~4잔 정도	23.09	21.86	23.98	22.46	24.6	22.35
			5~6잔 정도	10.47	8.15	10.99	11.74	9.03	11.86
			7~9잔 정도	20.2	19.22	20.03	22.25	21.29	18.14
			10잔 이상	16.41	13.2	14.67	17.21	18.55	17.24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둘째,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음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소도시, 그 다음으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횟수의 경우 주 4회 이상 마신다는 비율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량의 경우 7~9잔 이상 마신다는 비율은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2〉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66.28	64.60	69.45	58.62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4.79	48.23	43.10	32.92
			주 2~3회	35.75	35.79	35.21	39.12
			주 4회 이상	19.46	15.98	21.69	27.95
	음주량	1~2잔 정도	13.29	12.40	13.01	21.26	
		3~4잔 정도	20.02	23.24	16.84	19.61	
		5~6잔 정도	16.97	18.37	15.99	14.05	
		7~9잔 정도	26.27	23.67	28.85	26.51	
		10잔 이상	23.45	22.32	25.32	18.57	
	2006	비율		69.43	69.7	70.71	60.94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6.05	48.21	45.25	36.89
			주 2~3회	34.84	35.1	34.36	36.2
			주 4회 이상	19.10	16.68	20.39	26.91
음주량		1~2잔 정도	16.14	16.48	14.8	22.3	
		3~4잔 정도	19.90	20.36	19.28	20.77	
		5~6잔 정도	14.25	14.16	14.81	11.33	
		7~9잔 정도	27.05	26.94	27.91	22.36	
		10잔 이상	22.66	22.06	23.2	23.24	
2007		비율		73.49	73.75	74.8	65.08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7.19	48.39	46.93	41.21
			주 2~3회	34.41	35.34	33.97	31.23
			주 4회 이상	18.4	16.27	19.09	27.55
	음주량	1~2잔 정도	17.49	18.85	14.74	25.77	
		3~4잔 정도	20.37	21.55	19.2	20.11	
		5~6잔 정도	12.26	13.45	11.25	10.89	
		7~9잔 정도	26.63	25.48	28.44	22.75	
		10잔 이상	23.25	20.66	26.37	20.47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도 중소도시의 음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주횟수의 경우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주 4회 이상 마신다는 비율이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3〉 지역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비율		52.10	51.13	54.30	45.46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57.75	60.62	56.22	47.38
			주 2~3회	28.94	28.24	29.16	32.47
			주 4회 이상	13.31	11.14	14.61	20.15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21.84	21.63	21.08	28.77
			3~4잔 정도	23.85	26.10	21.77	21.94
			5~6잔 정도	15.51	16.36	14.92	13.38
			7~9잔 정도	20.88	18.59	23.32	20.50
			10잔 이상	17.92	17.33	18.90	15.40
	2006	비율		58.95	59.8	59.59	50.01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59.6	61.37	58.75	52.24
			주 2~3회	27.78	27.38	27.97	29.43
			주 4회 이상	12.62	11.25	13.28	18.33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27.38	28.13	26.08	30.78
			3~4잔 정도	22.57	22.77	22.24	23.32
			5~6잔 정도	12.62	12.21	13.4	10.33
			7~9잔 정도	20.77	20.76	21.16	18.13
			10잔 이상	16.66	16.13	17.11	17.44
2007		비율		64.81	65.3	65.86	55.93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61.27	62.24	61	56.36
			주 2~3회	26.84	27.3	26.61	25.15
			주 4회 이상	11.89	10.46	12.4	18.5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29.83	30.43	28.43	34.98
			3~4잔 정도	23.09	23.24	22.92	23.16
			5~6잔 정도	10.47	11.91	9.19	8.8
			7~9잔 정도	20.2	19.21	21.56	18.03
			10잔 이상	16.41	15.21	17.89	15.03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셋째,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주의 경우 남성의 음주율이 여성의 음주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음주횟수의 경우 주 1회 이하 마신다는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 2회 이상 마신다는 비율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량의 경우 4잔 이하 마신다는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5잔 이상 마신다는 비율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4〉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주)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66.28	73.40	33.73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4.79	42.19	70.65
			주 2~3회	35.75	37.05	22.80
			주 4회 이상	19.46	20.76	6.56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13.29	10.81	38.03
			3~4잔 정도	20.02	19.24	27.80
			5~6잔 정도	16.97	17.45	12.18
			7~9잔 정도	26.27	27.45	14.53
			10잔 이상	23.45	25.06	7.46
2006	비율		69.43	76.37	38.57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6.05	42.53	77.06
			주 2~3회	34.84	36.77	17.93
			주 4회 이상	19.10	20.70	5.02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16.14	13.26	41.45
			3~4잔 정도	19.90	19.17	26.30
			5~6잔 정도	14.25	14.22	14.48
			7~9잔 정도	27.05	28.73	12.32
			10잔 이상	22.66	24.62	5.45
2007	비율		73.49	80.77	41.71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47.19	43.86	75.34
			주 2~3회	34.41	36.27	18.72
			주 4회 이상	18.40	19.87	5.94
	음주 =100	음주 량	1~2잔 정도	17.49	13.75	49.12
			3~4잔 정도	20.37	19.81	25.09
			5~6잔 정도	12.26	12.45	10.63
			7~9잔 정도	26.63	28.82	8.12
			10잔 이상	23.25	25.17	7.04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도 남성의 음주율이 여성의 음주율 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음주횟수의 경우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주 1회 이하 마신다는 비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5〉 성별 음주율, 평균음주횟수, 평균음주량(가구원 전체)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05	비율			52.10	72.94	33.66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57.75	44.73	82.71
			주 2~3회	28.94	36.38	14.66
			주 4회 이상	13.31	18.89	2.63
		음주량	1~2잔 정도	21.84	10.46	43.66
			3~4잔 정도	23.85	19.60	31.99
			5~6잔 정도	15.51	18.04	10.65
	7~9잔 정도		20.88	26.88	9.36	
	10잔 이상	17.92	25.01	4.34		
	2006	비율			58.95	76.01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59.60	45.54	81.62
			주 2~3회	27.78	35.68	15.41
			주 4회 이상	12.62	18.79	2.97
		음주량	1~2잔 정도	27.38	13.32	49.40
			3~4잔 정도	22.57	19.43	27.49
			5~6잔 정도	12.62	14.47	9.72
7~9잔 정도			20.77	28.45	8.73	
10잔 이상		16.66	24.32	4.65		
2007		비율			64.81	80.45
	음주 =100	음주 횟수	주 1회 이하	61.27	46.23	83.18
			주 2~3회	26.84	35.61	14.07
			주 4회 이상	11.89	18.16	2.75
		음주량	1~2잔 정도	29.83	13.93	52.99
			3~4잔 정도	23.09	19.67	28.07
			5~6잔 정도	10.47	12.54	7.46
	7~9잔 정도		20.20	28.92	7.50	
	10잔 이상	16.41	24.95	3.98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와 같이 소득분위집단 간과 성별 간 음주율의 절대차이, 상대차이는 2007년의 경우 2005년, 2007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집단 간 음주율은 가구주의 경우 절대차이는 약간 감소하였고, 가구원 전체의 경우 약간 증가하였다.

〈표 5-36〉 음주에서의 보건의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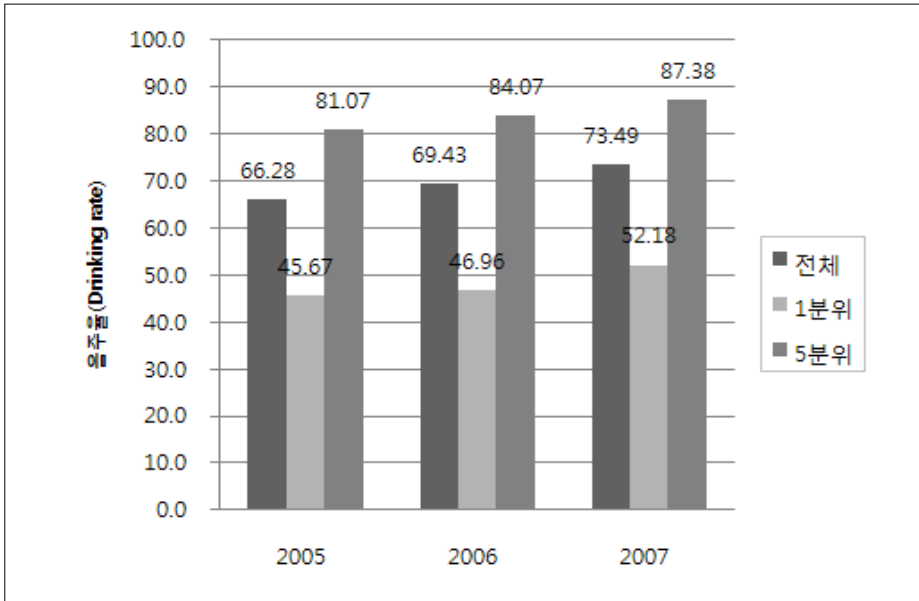
(단위: 점, 비율비)

구분	가구주						가구원 전체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소득분위집단 간		지역집단 간		성별 간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AD	RD
2005	35.40	1.78	10.83	1.18	39.67	2.18	21.32	1.57	8.84	1.19	39.28	2.17
2006	37.11	1.79	9.77	1.16	37.80	1.98	25.25	1.61	9.79	1.20	32.38	1.74
2007	35.20	1.67	9.72	1.15	39.06	1.94	26.03	1.55	9.93	1.18	29.94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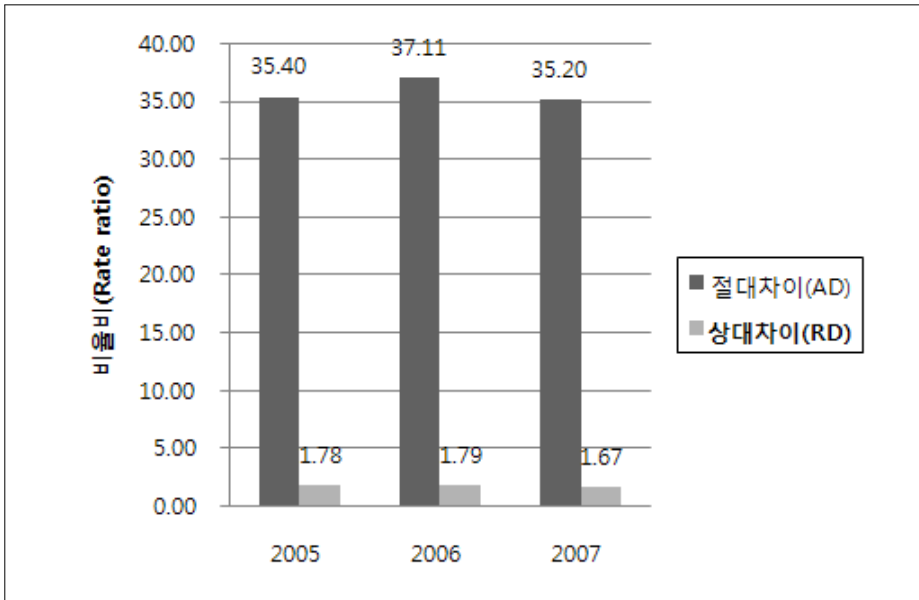
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율임.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주의 경우 소득분위집단 간 음주율의 추이, 절대차이 및 상대차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7] 음주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그림 5-8] 음주율: 가구주, 소득분위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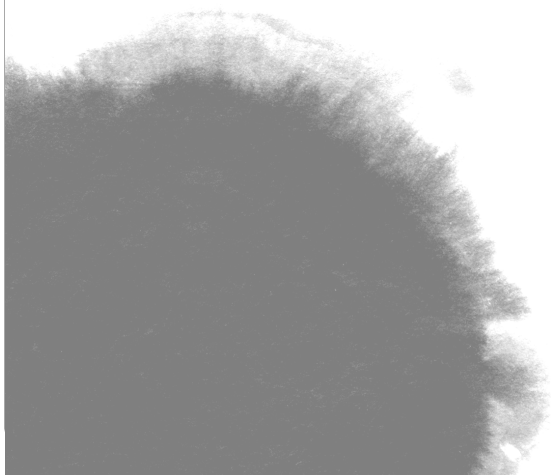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보건의료 지표에서는 분위별 분석 결과, 하위 소득분위 계층이 상위 소득분위 계층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정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건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점수 모두 저소득계층일수록 낮고,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으나, 흡연율은 소득계층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은 오히려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은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06

노동



제6장 노동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관련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최근의 국제적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의 분절과 고용 위기가 사회적 위험으로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노동정책의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를 비롯해 노동관련 국제기구에서는 노동 지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1982년 OECD 사회지표의 목록 중 사회지표의 영역에서 고용(가용 노동력)과 근로생활의 질을 다루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한국의 사회지표와 관련해 노동 부문으로 크게 고용·인력, 근로조건, 안전보호를 다루어 왔다. 한편, ILO의 World Labour Report 에서는 노동 인권, 고용, 노사관계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근로조건 등을 주요 지표로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노동에 관한 지표는 1987년에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복지지표 개발, 연구되어오고 있다³¹⁾. 한편, 최근 방하남 외(2007) 연구진은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거시적인 차원뿐 만 아니라 중위수준, 즉 기업수준과 미시수준인 개인 수준에서의 고용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³²⁾.

이러한 가운데 노동의 다양한 측면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타당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모든 지표를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기회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참

31) 이승렬·박찬임·남재광 (2003), 『근로복지지표 개발 및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32) 방하남·이영민·김기현·김한준·이상호 (2007),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가을,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을 살펴보았으며, 가구내 취업자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살펴보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연도별 지표의 변화 경향과 소득수준,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주요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필요에 따라 가구주³³⁾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노동지표 산출방식을 설명하며, 후속으로 이에 따른 산출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동지표 산출 방식

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은 대표적인 거시 노동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 근로능력 또는 근로의사가 없거나, 가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³⁴⁾을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고용률은 생산가능 인구³⁵⁾ 중 취업자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나타낸다. 경제상황 반영에 있어 실업률 통계의 한계, 즉 불경기에 구직단념자가 증가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실망실업자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3)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주의 개념을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34) 구직활동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는데, ILO에서는 1주일, OECD에서는 4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한다.

35) 현재 통계청에서는 생산가능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로 고용률을 산출하고 있다. OECD에서는 고용률 지표 생산에 있어 생산가능 인구의 연령을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소득과 지역 변수 외에 성별과 학력에 따른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령을 청년층(15세~29세), 중장년층(30세~54세), 고령자층(55세~64세), 초고령자층(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경우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나. 가구 내 취업자 수

상기 지표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여준다면, 본 지표는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내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여준다. 가구 내 개인별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가구별로 합산하여 가구 내 취업자 수를 산출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고, 2007년의 경우 소득분위별, 지역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단, 소득 1분위의 경우 단독, 고령자 가구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분위별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함께 제시하였다.

취업 여부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취업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경제활동 사유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인 가구원에 대해 그 사유를 아홉 가지: 근로 무능력, 군복무, 학업,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없음, 기타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근로무능력과 근로의사없음에 대한 응답을 병합하여 표기하였는데, 이는 근로무능력으로 응답한 가구원의 경우 높은 연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나 근로능력은 있으나 더 이상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근로의사없음 나타낸 경우 역시 근로능력은 있으나 은퇴 후 쉬고 있는 고연령층이 응답한 비중이 많아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경제활동 사유의 변화 경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였다.

라. 고용지위 비율 (또는 종사상 지위 비율)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경제활동상태 영역에 대한 조사에 있어 중·고생이 아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게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묻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비중에 대하여 2006년과 2007년의 변화³⁶⁾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2007년의 경우 종사상 지위 비중을 소득분

36) 경제활동참여상태의 경우 2005년 데이터에서 임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데이터 초

위별, 성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 비중 역시 가구주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마. 유해환경 근로 비율

유해환경 근로 비율은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5년, 2006년, 2007년 1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p0103_2=1, p0203_2=1, p0303_2=1)의 비율을 나타낸다.

$$\text{유해환경근로비율} = \frac{\text{유해환경에서 일한 경험 있는 사람}}{\text{근로경험이 있는 사람}} \times 100$$

본 지표는 소득변수 외에 성별,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경우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기 구축에 있어서 불안정으로 간주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분석하였다.

2.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³⁷⁾

2007년³⁸⁾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78%, 실업률은 3.64%, 고용률은 73.99% 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79.15%, 2006년 78.03%, 2007년 76.78로 , 실업률은 2005년 4.49%, 2006년 4.35%, 2007년 3.64%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고용률 역시 2005년 75.59%, 2006년 74.64%, 2007년 73.99%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실업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보이는 이유는 구직단념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의 감소의 효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소득 5분위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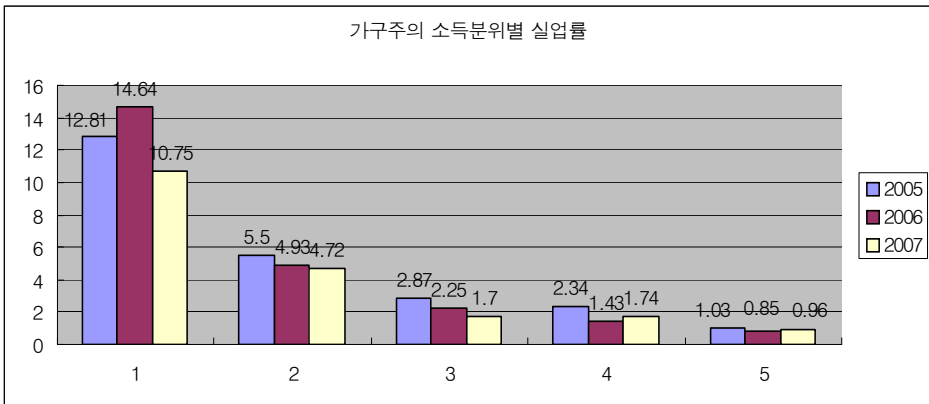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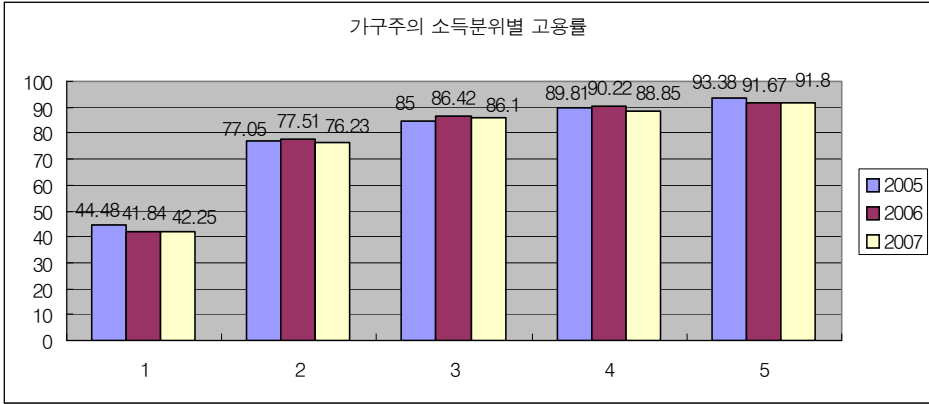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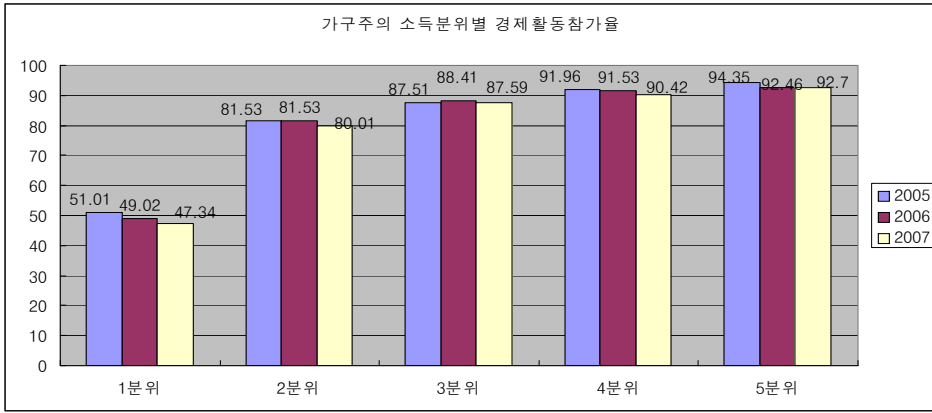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5	51.01	81.53	87.51	91.96	94.35
	2006	78.03	49.02	81.53	88.41	91.53	92.46
	2007	76.78	47.34	80.01	87.59	90.42	92.70
실업률	2005	4.49	12.81	5.50	2.87	2.34	1.03
	2006	4.35	14.64	4.93	2.25	1.43	0.85
	2007	3.64	10.75	4.72	1.70	1.74	0.96
고용률	2005	75.59	44.48	77.05	85.00	89.81	93.38
	2006	74.64	41.84	77.51	86.42	90.22	91.67
	2007	73.99	42.25	76.23	86.10	88.85	91.80

주: 조사 데이터의 업데이트로 인해 2007년 한국복지패널심층보고서에서의 지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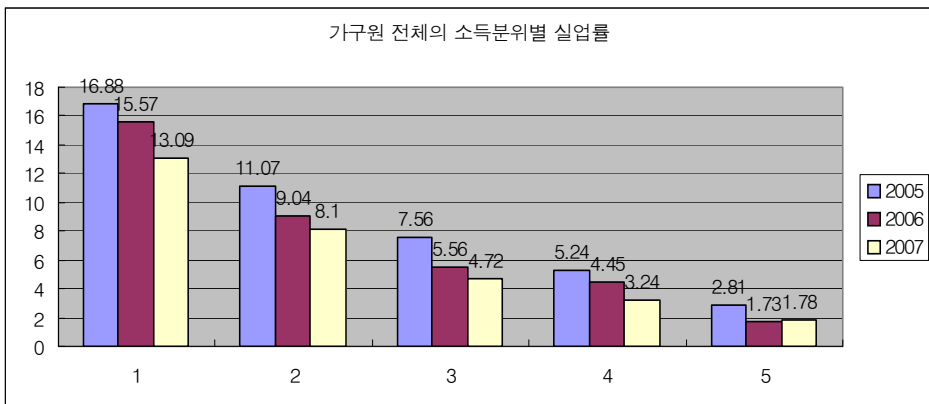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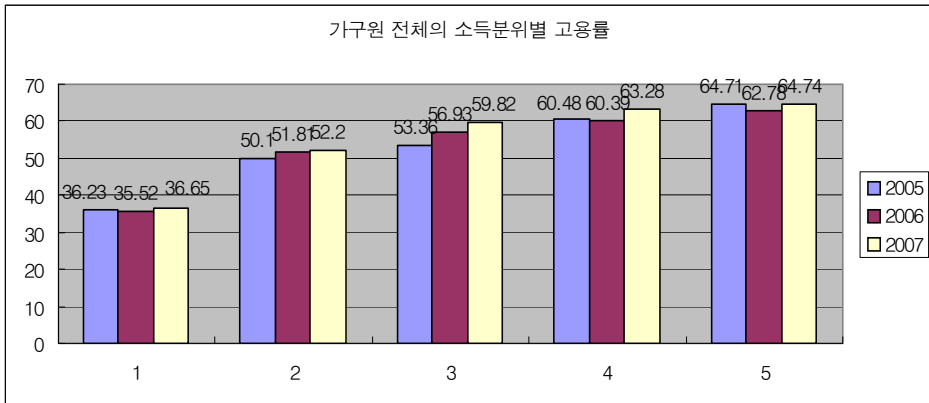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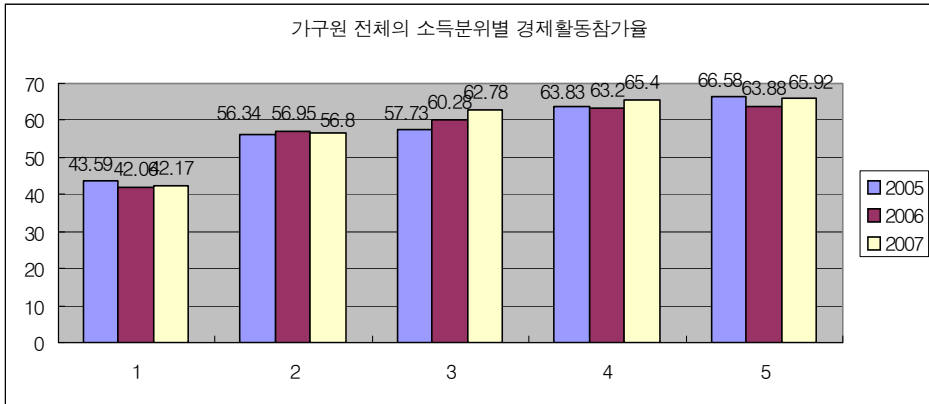
37) 한국복지패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기준시점은 전년도 12월 31이기 때문에 1차 조사 시 통계청의 지표보다 높은 실업률 수치를 보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조사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용직 임금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을 취업 인구로 파악하는 조사지침이 내려졌으며, 3차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한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취업인구로 파악'하는 것으로 추가지침이 제시되었다.

38) 해당 년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며, 본 고에서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6-1]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 지표



[그림 6-2] 가구원 전체의 소득분위별 경제활동 지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연도별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2005년 대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 역시 소득 5분위별 분석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소득 5분위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42	43.59	56.34	57.73	63.83	66.58
	2006	57.06	42.06	56.95	60.28	63.20	63.88
	2007	58.41	42.17	56.80	62.78	65.40	65.92
실업률	2005	8.12	16.88	11.07	7.56	5.24	2.81
	2006	6.68	15.57	9.04	5.56	4.45	1.73
	2007	5.63	13.09	8.10	4.72	3.24	1.78
고용률	2005	52.76	36.23	50.10	53.36	60.48	64.71
	2006	53.25	35.52	51.81	56.93	60.39	62.78
	2007	55.12	36.65	52.20	59.82	63.28	64.74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지역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구원 전체의 경우 농어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실업률은 가구주와 가구원전체 모두 농어촌에서 중소도시, 대도시로 갈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6-3>과 표 <6-4>와 같다.

〈표 6-3〉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5	76.94	82.04	76.24
	2006	78.03	75.83	80.93	74.96
	2007	76.78	75.29	78.88	73.82
실업률	2005	4.49	5.77	3.60	2.09
	2006	4.35	5.27	3.78	2.30
	2007	3.64	5.22	2.48	1.30
고용률	2005	75.59	72.50	79.09	74.64
	2006	74.64	71.83	77.87	73.24
	2007	73.99	71.36	76.93	72.8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6-4〉 지역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42	55.87	58.56	60.87
	2006	57.06	55.16	58.49	60.71
	2007	58.41	56.58	59.87	61.13
실업률	2005	8.12	9.77	7.20	3.43
	2006	6.68	7.58	6.42	2.98
	2007	5.63	6.90	5.00	2.07
고용률	2005	52.76	50.41	54.35	58.78
	2006	53.25	50.98	54.74	58.90
	2007	55.12	52.68	56.88	59.8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성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보였으며, 실업률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5〉 성별 경제활동지표(가구주)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5	84.38	55.33
	2006	78.03	83.91	52.33
	2007	76.78	82.92	50.25
실업률	2005	4.49	4.03	7.75
	2006	4.35	3.92	7.39
	2007	3.64	3.45	5.00
고용률	2005	75.59	80.98	51.04
	2006	74.64	80.63	48.47
	2007	73.99	80.06	47.74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6-6〉 성별 경제활동지표(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42	73.39	43.18
	2006	57.06	72.03	43.06
	2007	58.41	72.36	45.72
실업률	2005	8.12	6.76	10.19
	2006	6.68	5.57	8.32
	2007	5.63	5.12	6.36
고용률	2005	52.76	68.43	38.79
	2006	53.52	68.02	39.97
	2007	55.12	68.66	42.82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학력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경우, 중학교 이하보다는 고졸 이하가, 고졸 이하보다는 전문대졸 이상이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그리고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문대졸보다 낮게 나타났다으며,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 실업률 역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6-7〉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단위: %)

		전체	중학교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5	50.94	86.15	94.30	89.97
	2006	78.03	56.95	86.34	95.03	88.87
	2007	76.78	55.09	85.87	93.08	88.24
실업률	2005	4.49	6.62	4.89	3.91	2.53
	2006	4.35	6.18	4.12	4.25	3.22
	2007	3.64	4.70	4.12	2.34	2.57
고용률	2005	75.59	55.05	81.93	90.61	87.69
	2006	74.64	53.43	82.78	90.99	86.01
	2007	73.99	52.50	82.33	90.90	85.97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원 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6-8〉 학력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중학교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42	44.37	58.78	70.83	65.64
	2006	57.06	45.67	58.59	70.70	64.20
	2007	58.41	44.49	59.98	70.99	68.42
실업률	2005	8.12	7.70	9.03	9.08	6.92
	2006	6.68	6.58	7.07	9.57	5.14
	2007	5.63	4.35	6.58	7.18	4.82
고용률	2005	52.76	41.88	53.47	64.40	61.09
	2006	53.25	42.66	54.45	63.93	60.90
	2007	55.12	42.55	56.04	65.89	65.12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연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고령자층(55~64세), 초고령층(65세 이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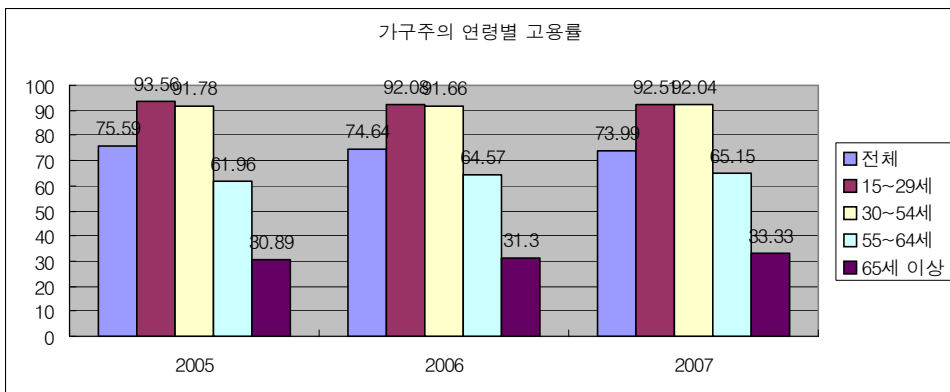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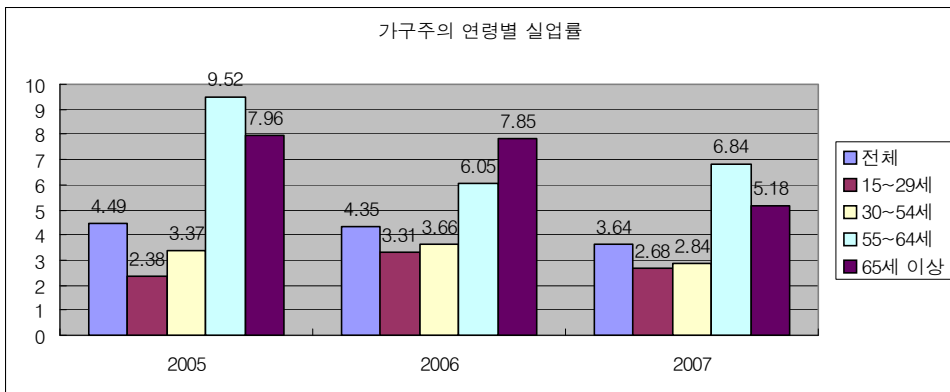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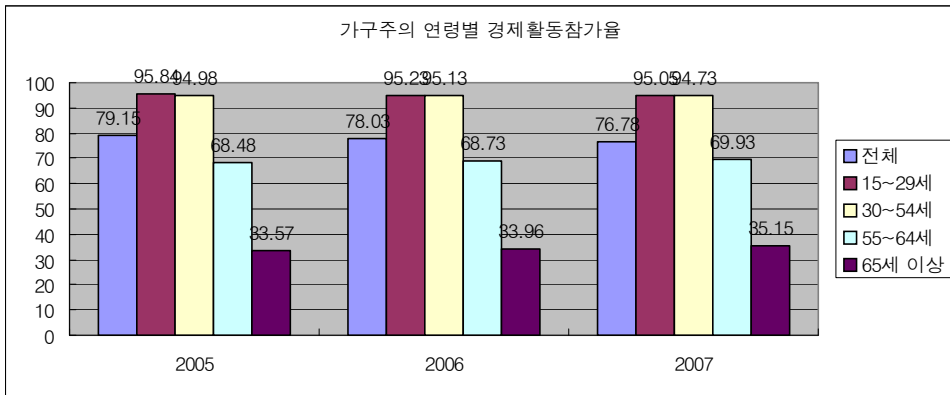
〈표 6-9〉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주)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	79.15	95.84	94.98	68.48	33.57
	2006	78.03	95.23	95.13	68.73	33.96
	2007	76.78	95.05	94.73	69.93	35.15
실업률	2005	4.49	2.38	3.37	9.52	7.96
	2006	4.35	3.31	3.66	6.05	7.85
	2007	3.64	2.68	2.84	6.84	5.18
고용률	2005	75.59	93.56	91.78	61.96	30.89
	2006	74.64	92.08	91.66	64.57	31.30
	2007	73.99	92.51	92.04	65.15	33.33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6-3] 가구주의 연령별 경제활동 지표



가구원 전체를 살펴보면, 30~54세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5세 이상 초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은 15~29세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0〉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2005	57.42	41.99	74.69	52.77	26.34
	2006	57.06	37.74	76.00	55.04	27.39
	2007	58.41	41.52	77.50	55.55	29.05
실업률	2005	8.12	14.95	6.17	9.95	7.55
	2006	6.68	11.15	5.72	6.68	6.46
	2007	5.63	9.52	4.87	5.59	4.42
고용률	2005	52.76	35.71	70.08	47.52	24.35
	2006	53.25	33.54	71.65	51.36	25.62
	2007	55.12	37.57	73.73	52.45	27.7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나. 가구내 취업자 수

앞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구주 또는 가구원 전체의 전반적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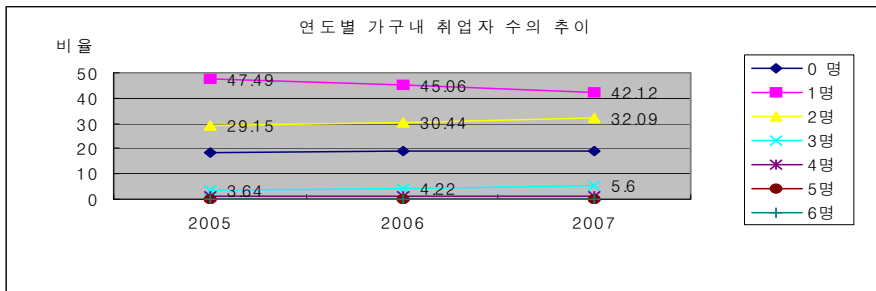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래 표 <6-11>와 같다. 취업자 수가 한명도 있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약 19%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특성 상 저소득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자 수가 1명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에 약 47.5% 이었던 것에 반해 2006년 약 45%, 2007년 약 42.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반면 가구 내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 약 29% 대비 2007년 약 32%로 증가하였으며, 가구 내 취업자 수가 3명인 비율 역시 2005년에 약 3.6%였던 것에 반해 2007년에는 약 5.6%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표 6-11〉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연도별 추이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전체
2005	18.69	47.49	29.15	3.64	0.91	0.07	0.05	100.00
2006	19.15	45.06	30.44	4.22	0.97	0.14	0.02	100.00
2007	18.9	42.12	32.09	5.6	1.14	0.15	-	100.00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6-4〕 연도별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추이



2) 소득 5분위별 가구 내 취업자 수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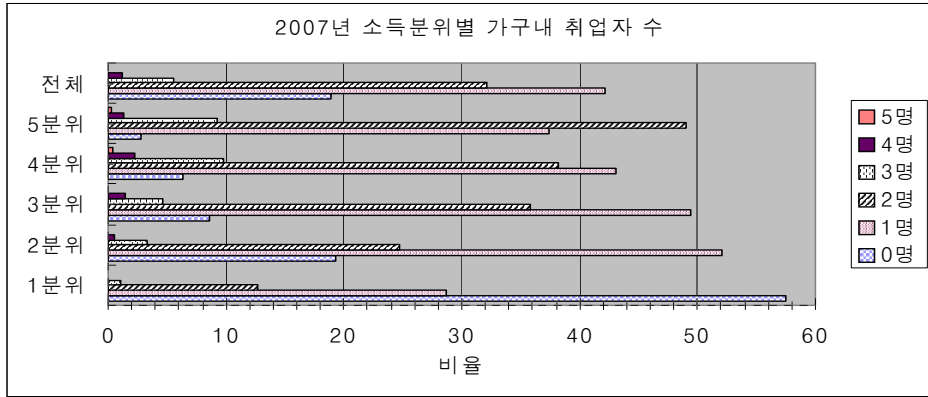
보다 세부적으로 2007년에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 살펴 보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약 57%의 비율에서 가구 내 취업자 수가 한명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우 약 3%에 머물렀다.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가구가 높은 소득계층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가구 내 취업자 수가 2명이 상인데도 소득 2분위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이 약 25%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6-12〉 소득 5분위별 가구 내 취업자 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총합
1분위	57.47	28.64	12.72	1.01	0.16	-	100.00
2분위	19.34	52.02	24.75	3.33	0.54	0.02	100.00
3분위	8.6	49.43	35.76	4.64	1.48	0.09	100.00
4분위	6.35	43.08	38.18	9.73	2.27	0.39	100.00
5분위	2.75	37.42	49.03	9.29	1.26	0.25	100.00
전체	18.9	42.12	32.09	5.6	1.14	0.15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그림 6-5] 2007년 소득분위별 가구 내 취업자 수



이러한 경향의 뒷받침하는 설명으로서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연령과 근로능력상태, 그리고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표 6-13> 소득 5분위별 가구주 연령

(단위: %)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1분위	0.39	30.78	14.12	54.71	100.00
2분위	0.92	60.45	16.54	22.09	100.00
3분위	1.29	70.22	15.46	13.03	100.00
4분위	1.3	76.8	14.28	7.62	100.00
5분위	-	77.04	16.3	6.66	100.00
전체	0.75	60.2	15.25	23.81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5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2분위의 경우 약 22%를 차지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65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취업자의 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14〉 소득 5분위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상태

(단위: %)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	근로능력 없음	총합
1 분위	58.28	15.64	20.43	5.65	100.00
2 분위	87.52	4.77	5.79	1.92	100.00
3 분위	94.31	1.69	3.6	0.4	100.00
4 분위	95.95	1.37	1.77	0.91	100.00
5 분위	97.72	1.06	0.71	0.51	100.00
전체	84.26	5.85	7.68	2.21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근로능력상태 역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근로가능한 가구주의 비율이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단순근로 미약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주의 비율이 약 26%로 저소득층 가구주의 경우 고령자인데다 근로능력이 없어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표 6-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주가 건강하지 않거나 아주 좋지 않은 비율이 약 43%로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도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표 6-15〉 소득 5분위별 가구주 건강상태

(단위: %)

	아주 건강함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 아주 안 좋음	무응답	총합
1 분위	5.19	26.75	24.76	35.08	8.13	0.09	100.00
2 분위	11.29	47.1	20.98	17.53	3.02	0.08	100.00
3 분위	16.29	54.06	19.42	9.43	0.8	-	100.00
4 분위	19.28	55.67	16.86	7.79	0.4	-	100.00
5 분위	21.64	56.01	15.35	6.5	0.5	-	100.00
전체	13.87	46.05	19.95	17.02	3.06	0.04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한편, 지역별로 가구내 취업자 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농촌이나 대도시에 비해 가구내 취업자 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구성은 약간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가구내 1명 취업자의 비중이 약 43%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은 가구내 취업자 수가 2명인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6〉 2007년 지역별 가구내 취업자 수

(단위: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총합
대도시	20.06	42.79	29.74	6.01	1.27	0.13	100.00
중소도시	17.02	43.23	33.29	5.27	0.99	0.2	100.00
농촌	22.23	33.13	38.26	5.12	1.26	-	100.00
전체	18.9	42.12	32.09	5.6	1.14	0.15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사유

앞서 나타난 실업률의 하락과 고용률의 하락을 설명하는데 있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이 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사유를 분석하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연도별 비경제활동 사유의 변화를 나타내고, 이를 소득분위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1) 비경제활동 사유의 변화

2005년도에 비경제활동 사유의 비율은 가사(31.45%),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27.9%), 학업(23.36%), 양육(8.15%), 구직활동 포기(3.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30.67%), 가사(26.06%), 학업(25.32%), 양육(8.01%), 구직활동 포기(5.6%)로 2007년의 경우 역시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30.16%), 가사(25.81%), 학업(25.44%), 양육(8.77%), 구직활동

포기(5.48%)의 비율로 나타나 가사의 비중이 낮아지고, 학업과 근로무능력 및 근로 의사 없음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 포기의 비율도 2005년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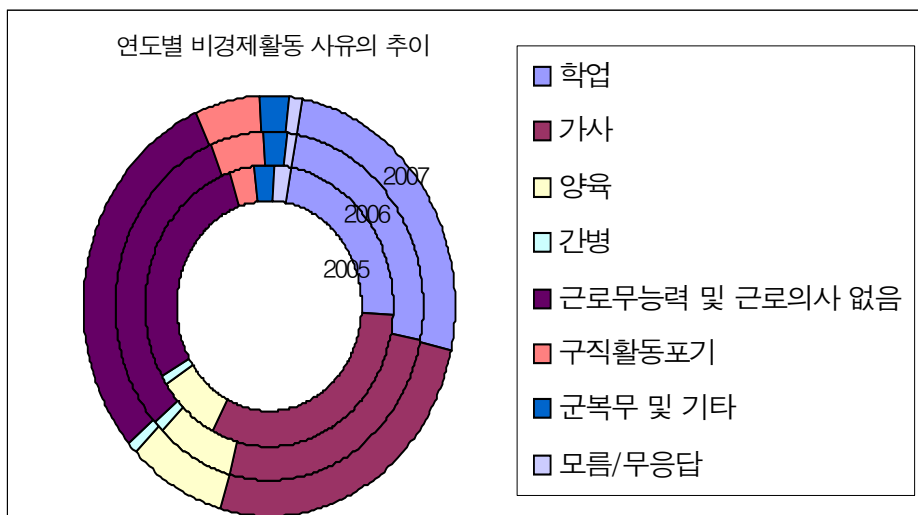
〈표 6-17〉 비경제활동 사유의 연도별 차이

(단위: %)

	학업	가사	양육	간병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	구직활동 포기	군복무 및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2005	23.36	31.45	8.1	1.11	27.9	3.44	2.42	2.23	100.00
2006	25.32	26.06	8.01	1.08	30.67	5.6	2.37	0.88	100.00
2007	25.44	25.81	8.77	0.76	30.16	5.48	2.41	1.16	100.00

자료: KOWEPS 1차~3차년도 원자료

[그림 6-6] 연도별 비경제활동 사유의 추이



2) 주요 기준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이어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를 소득분위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의 사유로서 학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구직활동 포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8〉 소득분위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단위: %)

		학업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 포기	근로무능 력 및 근로의사 없음	군복무 및 기타	모름/무 응답	전체
2005	1분위	12.95	23.12	2.97	1.29	5.76	49.77	2.57	1.57	100.00
	2분위	24.11	29.59	10.64	1.54	4.4	24.88	2.58	2.26	100.00
	3분위	23.08	33.46	12.87	1.7	3.22	20.16	3.19	2.32	100.00
	4분위	28.44	38.86	10.32	0.37	1.21	17.23	1.93	1.64	100.00
	5분위	36.07	38.39	5.96	0.28	0.7	13.16	1.53	4.0	100.00
2006	1분위	12.82	18.62	3.2	1.97	9.38	50.54	2.38	1.09	100.00
	2분위	26.88	24.16	9.54	0.94	6.04	29.39	2.11	0.94	100.00
	3분위	27.55	30.27	13.93	0.87	4.03	20.05	2.2	1.1	100.00
	4분위	30.78	31.82	10.62	0.45	2.24	19.64	3.47	0.98	100.00
	5분위	36.92	30.66	5.79	0.56	3.69	20.45	1.79	0.14	100.00
2007	1분위	12.16	20.02	2.17	1.38	9.57	50.66	2.58	1.46	100.00
	2분위	23.77	25.61	12.14	1.18	5.29	27.63	2.74	1.64	100.00
	3분위	28.07	29.57	15.55	0.4	3.74	19.67	2.31	0.69	100.00
	4분위	36.13	28.3	11.34	0.11	2.16	18.64	2.33	0.99	100.00
	5분위	37.62	29.97	6.97	0.17	3.57	19.12	1.85	0.73	100.00

자료: KOWEPS 1차~3차년도 원자료

성별에 따라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2005년도 남성의 경우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43.73%)과 학업(40.29%)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가사(44.32%)와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21.3%)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이 외에도 학업(16.3%), 양육(11.45%)의 비율을 비경제활동 사유로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42.3%)과 학업(40.24%)을 여성의 경우 가사(37.56%)와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24.55%)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가사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과 학업은 증가하였다.

〈표 6-19〉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단위: %)

		학업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 포기	근로무능 력 및 근로의사 없음	군복무 및 기타	모름/무 응답	전체
2005	남성	40.29	0.61	0.06	0.96	7.27	43.73	4.44	2.64	100.00
	여성	16.3	44.32	11.45	1.17	1.84	21.3	1.57	2.05	100.00
2006	남성	41.55	0.47	-	0.55	10.06	41.59	4.67	1.11	100.00
	여성	18.09	37.47	11.58	1.31	3.61	25.8	1.35	0.79	100.00
2007	남성	40.24	0.42	0.08	0.55	9.78	42.3	5.34	1.29	100.00
	여성	18.59	37.56	12.8	0.86	3.50	24.55	1.05	1.09	100.00

자료: KOWEPS 1차~3차년도 원자료

연령에 따라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학업(81.3%), 양육(6.3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가사(50.98%), 양육(25.37%),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없음(12.73%) 순으로 사유를 꼽았다. 55세~64세의 장년층의 경우, 가사(42.67%)와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없음(40.24%), 구직활동 포기(11.28%)의 순으로 비경제활동 사유가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없음(67.9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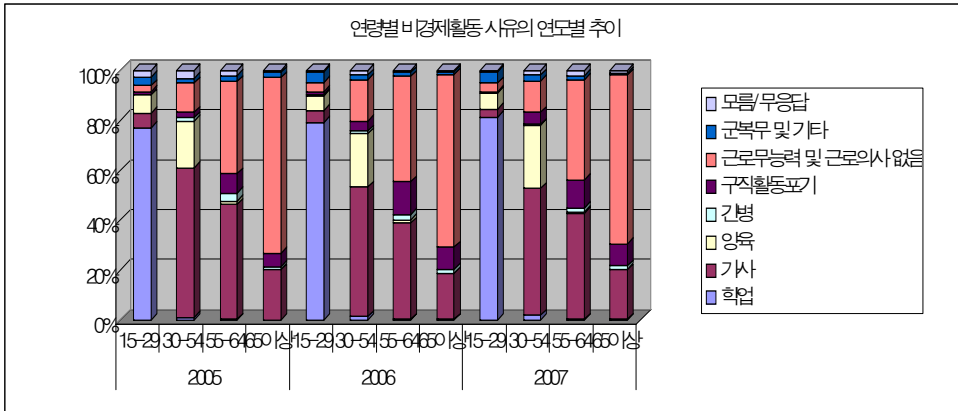
〈표 6-20〉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유

(단위: %)

		학업	가사	양육	간병	구직활동 포기	근로무능력 및 근로의사 없음	군복무 및 기타	모름/무 응답	전체
2005	15-29	77.02	5.97	7.27	0.24	0.96	2.51	3.44	2.59	100.00
	30-54	0.80	60.16	18.93	1.11	2.18	11.81	1.77	3.24	100.00
	55-64	0.05	46.28	1.22	3.14	7.98	36.86	2.37	2.10	100.00
	65이상	-	20.01	0.32	1.02	5.30	70.61	2	0.74	100.00
2006	15-29	79.24	4.76	5.98	0.36	1.08	3.78	4.32	0.48	100.00
	30-54	1.12	52.16	21.46	0.96	4.04	16.53	1.89	1.84	100.00
	55-64	0.15	38.60	1.19	2.22	13.18	42.43	1.62	0.61	100.00
	65이상	0.06	18.55	0.17	1.47	8.75	69.48	1.01	0.51	100.00
2007	15-29	81.3	3.26	6.35	0.15	0.43	3.55	4.43	0.53	100.00
	30-54	1.70	50.98	25.37	0.46	4.72	12.73	2.39	1.65	100.00
	55-64	0.1	42.67	0.56	1.44	11.28	40.24	1.77	1.94	100.00
	65이상	0.08	19.8	0.34	1.35	8.82	67.91	0.63	1.07	100.00

자료: KOWEPS 1차~3차년도 원자료

[그림 6-7] 연령별 비경제활동 사유의 연도별 추이



라. 종사상 지위 비율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도별로 살펴보고, 2007년의 경우 소득분위별,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종사상 지위 비율의 변화

2006년의 경우 취업가구의 경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54.22%), 자영업(21.72%), 일용직(9.97%), 임시직(7.21%), 고용주(5.5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이와 유사하게 상용직(53.03%), 자영업(22.02%), 일용직(10.68%), 임시직(7.16%), 고용주(5.83%)의 비율을 보였다.

〈표 6-21〉 취업 가구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4.22	7.21	9.97	0.63	5.57	21.72	0.68	100.00
2007	53.03	7.16	10.68	0.62	5.83	22.02	0.66	100.00

자료: KOWEPS 2차~3차년도 원자료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취업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는 2006년 상용직(51.37%), 자영업(16.71%), 임시직(10.73%), 일용직(9.63%), 무급가족종사(6.74%), 고용주(4.23%)의 비중을 보였으며, 2007년에는 상용직(49.92%), 자영업(16.56%), 일용직(11.69%), 임시직(10.79%), 무급가족종사(6.11%), 고용주(4.39%)의 비율을 보였다.

〈표 6-22〉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취업가구원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2006	51.37	10.73	9.63	0.59	4.23	16.71	6.74	100.00
2007	49.92	10.79	11.69	0.54	4.39	16.56	6.11	100.00

자료: KOWEPS 2차-3차년도 원자료

2) 2007년 주요 기준별 종사상지위의 비중

먼저 소득 5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임시 또는 일용직 비율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44.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일용직 25.33%, 상용직 14.82%의 비율로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도 1.6%를 차지하였다. 소득1분위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월등히 낮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불경기에 고용불안정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소득 2분위에서 역시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7.48%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고용불안정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내었다.

〈표 6-23〉 소득분위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1분위	14.82	9.74	25.33	3.02	1.29	44.21	1.60	100.00
2분위	43.91	10.05	17.48	0.37	2.18	25.49	0.52	100.00
3분위	58.48	8.73	7.21	0.41	3.94	20.75	0.48	100.00
4분위	65.72	5.20	6.62	-	6.51	15.61	0.33	100.00
5분위	69.72	3.27	1.95	-	13.24	11.19	0.64	100.00
전체	53.03	7.16	10.68	0.62	5.83	22.02	0.66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소득 분위별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전체의 종사상 지위 역시 가구주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소득 1분위에 있는 취업자를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의 비중이 32.91%로 가장 높으며, 일용직 임금근로자 24.65%,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6%, 무급가족종사자 13.57%,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0.99%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자활 및 공공근로 참여자가 2.81%를 나타내 상당수의 저소득층 취업자가 자활 및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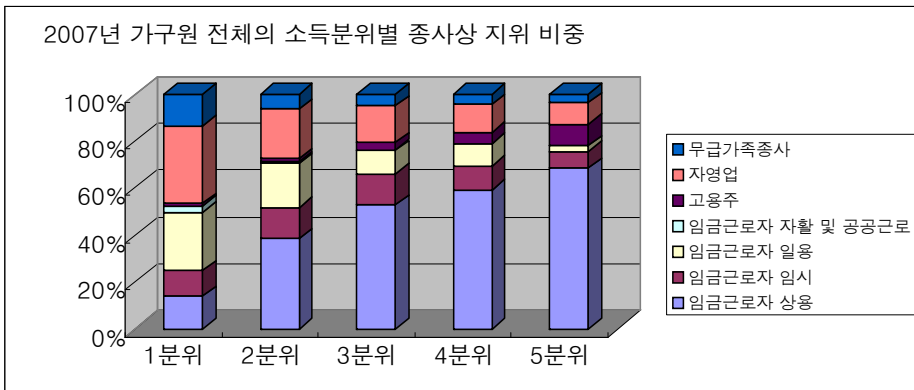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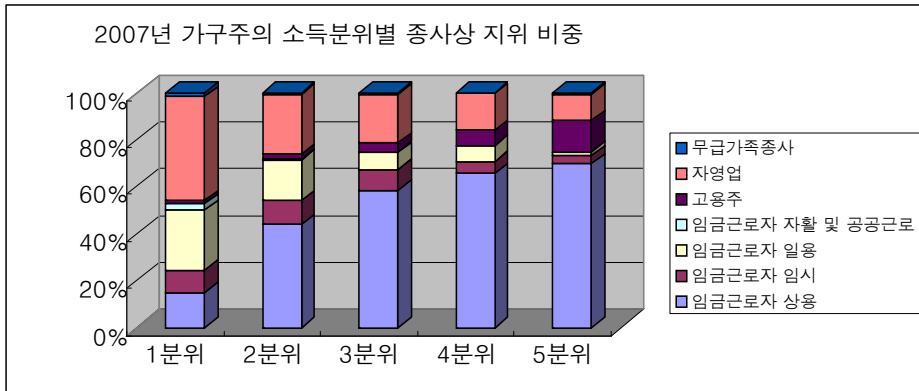
〈표 6-24〉 소득분위별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1분위	13.96	10.99	24.65	2.81	1.10	32.91	13.57	100.00
2분위	38.25	13.49	18.81	0.43	1.59	20.89	6.54	100.00
3분위	52.85	13.25	9.91	0.33	3.07	15.50	5.11	100.00
4분위	59.24	10.14	9.57	-	4.64	11.94	4.47	100.00
5분위	68.49	7.14	2.27	-	9.32	8.95	3.83	10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그림 6-8] 2007년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



성별에 따른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비율이 55.41%, 5.97%, 9.42%로 나타난 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35.85%, 15.78%, 19.8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가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중 자활 및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성별 비중은 여성이 3.99%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25〉 가구주의 성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남성	55.41	5.97	9.42	0.16	6.43	21.87	0.75	100.0
여성	35.85	15.78	19.83	3.99	1.47	23.09	-	1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으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 근로자의 비율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2.1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6〉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성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남성	55.24	7.71	10.23	0.18	5.88	19.46	1.31	100.0
여성	42.16	15.29	13.83	1.07	2.21	12.32	13.11	1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연령별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청년층 가구주의 약 75%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년층 역시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약 61%, 자영업의 비중이 약 15%를 차지하였다. 55세 이상의 장년층 가구주의 경우에는 36.38%가 자영업, 33.09%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주의 경우 약 59%의 비중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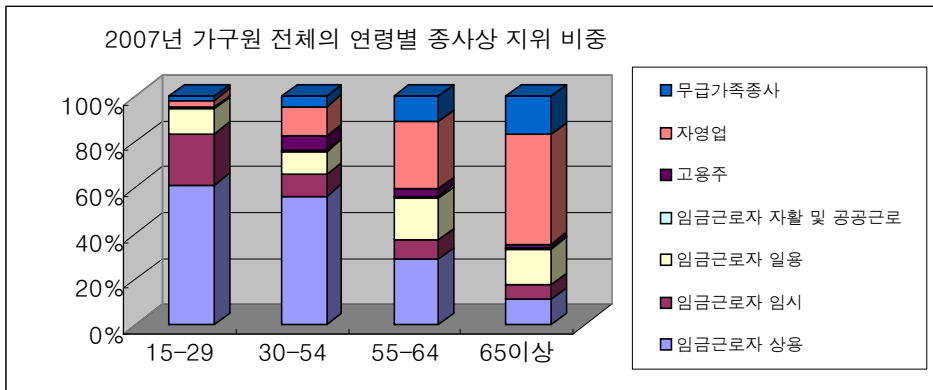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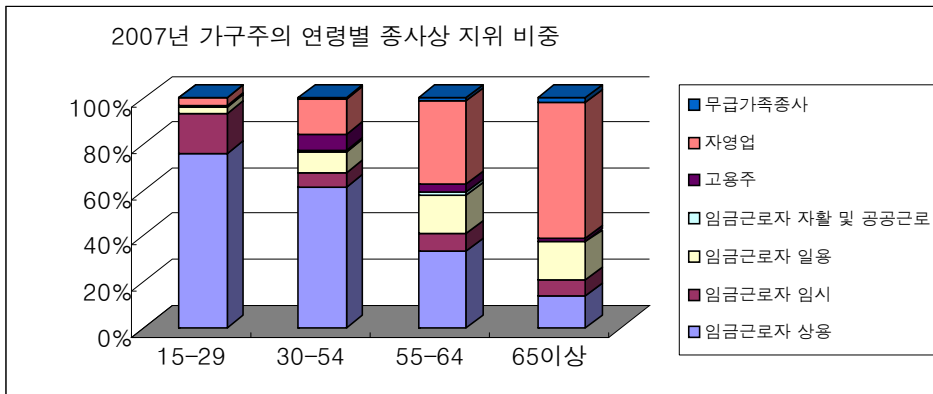
〈표 6-27〉 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15-29	75.70	17.57	2.51	-	0.94	3.27	-	100.0
30-54	61.08	6.27	9.21	0.64	7.22	15.10	0.48	100.0
55-64	33.09	7.79	16.97	0.94	3.95	36.38	0.89	100.0
65이상	13.59	6.85	16.63	0.45	1.56	58.99	1.93	1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그림 6-9〕 2007년 연령별 종사상 지위 비중



전체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경우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직 또는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6-29〉 연령별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종사상지위 비중 (2007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자활 및 공공근로				
15-29	61.25	22.30	10.88	0.11	0.31	3.30	1.86	100.0
30-54	56.36	9.19	10.23	0.55	5.89	13.06	4.72	100.0
55-64	28.72	8.46	18.02	1.17	3.24	29.28	11.11	100.0
65이상	11.38	6.21	15.61	0.42	1.74	47.72	16.91	100.0

자료: KOWEPS 3차년도 원자료

마. 유해환경 근로비율

2005년 1년 동안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14.16%,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12.18%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15.25%, 전체 가구원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12.48%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가구주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17.37%, 가구원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13.14%로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 모두 1분위보다 2분위의 경우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분위 이후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30〉 소득 5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4.16	15.19	17.71	18.97	12.35	8.08
	2006	15.25	18.34	21.60	16.17	13.12	8.23
	2007	17.37	18.85	26.44	17.94	16.40	8.25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6-31〉 소득 5분위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2.18	14.65	15.03	15.37	11.12	7.42
	2006	12.48	15.85	16.84	13.10	11.14	7.27
	2007	13.14	15.74	20.20	13.44	12.19	6.2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7년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약 0.6%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7년의 경우 약 4%가 증가하여 그 차이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32〉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4.16	14.95	8.47
	2006	15.25	16.39	8.23
	2007	17.37	18.67	9.07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6-33〉 성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2.18	14.67	7.61
	2006	12.48	16.18	7.42
	2007	13.14	17.72	6.8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의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의 유해환경 근로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6-34〉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4.16	20.28	16.93	12.81	6.81
	2006	15.25	20.13	20.64	9.52	5.99
	2007	17.37	23.88	22.44	11.18	7.09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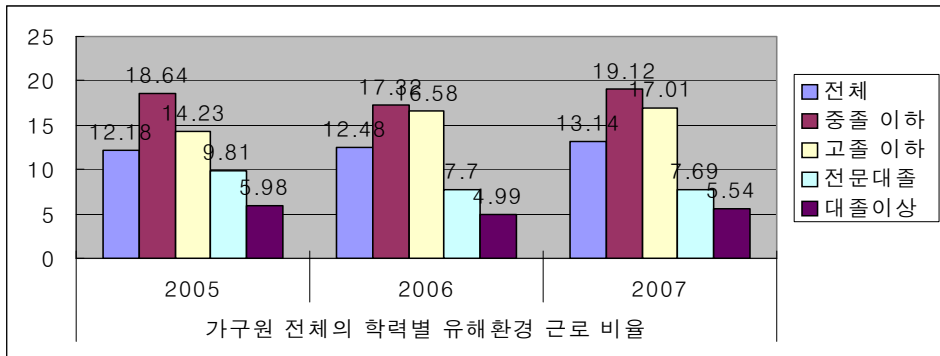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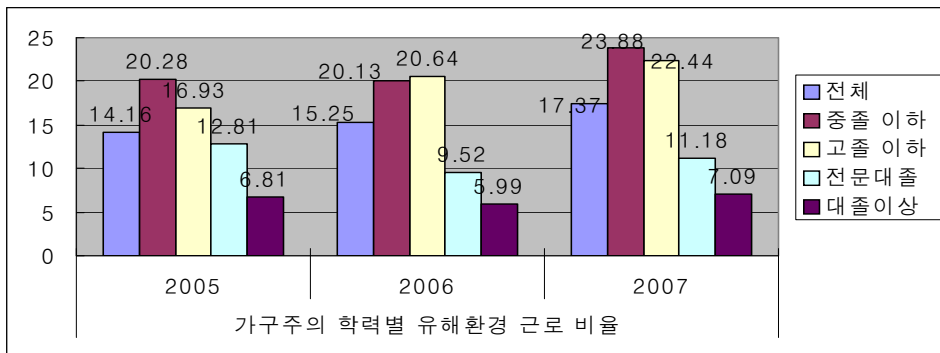
〈표 6-35〉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2.18	18.64	14.23	9.81	5.98
	2006	12.48	17.32	16.58	7.70	4.99
	2007	13.14	19.12	17.01	7.69	5.54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6-10〉 학력별 유해환경 근로비율



연령별로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살펴보면, 가구주와 가구원 전체 모두 55세-64세의 경우에 유해환경 근로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초고령층 근로자 가구주의 경우 2007년 유해환경 근로비율은 약 14.6%로 이전 년도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6-36〉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주)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4.16	10.54	15.26	14.38	6.82
	2006	15.25	11.13	16.02	17.71	9.60
	2007	17.37	8.87	17.73	21.33	14.63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표 6-37〉 연령별 유해환경 근로 비율 (가구원 전체)

(단위: %)

		전체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유해환경 근로 비율	2005	12.18	8.75	13.11	13.31	8.69
	2006	12.48	7.59	13.61	15.15	10.13
	2007	13.14	6.17	14.16	17.47	13.15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노동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과 가구 내 취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경제활동 사유, 종사상 지위 비중, 그리고 유해환경 근로비율을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 분석 결과, 소득 하위계층일 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여성, 고령자, 청년층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고용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살펴본 결과,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최근 들어 맞벌이 가구 등과 같이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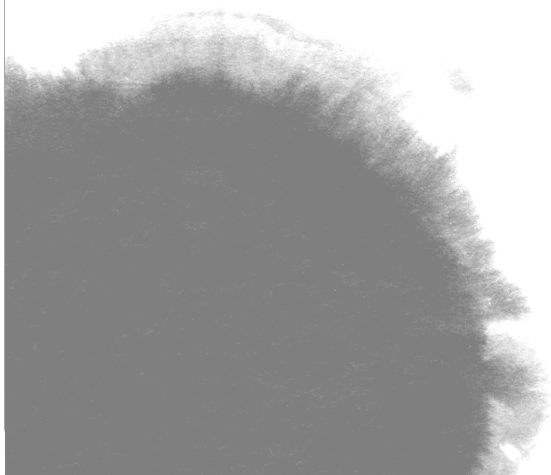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되었다. 하위소득계층에서도 맞벌이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가구 중심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이면에는 청년층의 학업 연장과 중장년층의 구직활동 포기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유발되는 청년 실업문제를 비롯해 구직단념자와 같이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비중 분석 결과, 소득 하위계층에서 자영업과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의 영향이 일차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세자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적 차원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07

복지수급



제7장 복지수급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별 복지수급지표 산출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한 산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복지수급 지표는 공공부조제도, 공적연금제도,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대상으로 산출된다. 각 제도별 수급지표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부조제도 수급 지표 산출방식

공공부조제도 수급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으로 수요에 대한 제도의 양적인 대응 정도와 질적인 대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산출한다. 제도의 수요에 대한 제도의 양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욕구 대비 수급률을, 질적인 대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장수준을 산출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욕구 대비 수급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빈곤 가구 중 수급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가구는 소득빈곤가구를 의미하는데, 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인 정부가 발표한 해당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했다.

또한, 소득이 절대빈곤선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할 때,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수급하기 전 소득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욕구를 가진 가구라는 개념에서 빈곤가구는 공적이전을 받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욕구 대비 수급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욕구대비수급률} = \frac{\text{기초보장수급가구}}{\text{소득빈곤가구*}} \times 100$$

* 소득빈곤가구: 기초보장급여 전 소득(경상소득-기초보장급여)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보장수준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수급가구에게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이 해당 가구의 욕구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해당 가구의 욕구를 최저생활보장이라고 할 때, 급여가 실제 지출한 총생활비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기초보장 급여를 포함한 경상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표를 산출하고자 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지표는 급여의 최저생활보장수준을 살펴보는 지표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필요 최소 소비액 중 기초보장 현금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해당가구가 빈곤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 소비액을 실제 지출한 총생활비라고 전제한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생활비대비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총생활비}} \times 100$$

소득 대비 보장수준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능력 중 기초보장 현금 급여가 어느 정도를 보장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가구의 경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경상소득을 사용한다. 소득 대비 보장수준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소득대비보장수준} = \frac{\text{현금급여액}}{\text{경상소득}} \times 100$$

나.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 산출방식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괄하는 공적연금을 수급률과 이 중 국민연금 수급률을 별도로 분석한다. 수급률은 현재 시점에서 제도의 수요가 있는 대상 중 어느 정도 비율이 혜택을 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1) 공적연금 수급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에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수급률을 산출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적연금 급여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 연금과 반환일시금,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대상의 고유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즉,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공적연금 수급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공적연금수급률} = \frac{\text{노령연금*수급자}}{\text{60세이상노인}} \times 100$$

*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포함)이 포함됨.

2)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수급률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의 되는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60세 이상 노인 중 특수지역연금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비율을 산출한다.

$$\text{국민연금수급률} = \frac{\text{노령연금*수급자}}{\text{60세이상노인**}} \times 100$$

*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60세 이상 노인 중 특수지역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제외.

다.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지표 산출방식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를 산출한다. 한국복지패널 설문지의 주거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수급여부는 해당 년도 1년간 해당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묻고 있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수급률이 아닌 연간 이용경험률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중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범주별 프로그램들의 종합적인 이용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은 전체 가구 중 해당년도 1년간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과 공공(국민)임대 주택 이용경험률을 각각 산출하고자 한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이용경험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주거지원프로그램*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가구**}}{\text{전체가구}} \times 100$$

* 주거지원 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 이용경험: 해당 년도 1년간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

2)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노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노인 대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 재원만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지원이 들어간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경로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로 공공부문 재원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노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노인가구***}}{\text{전체노인가구}} \times 100$$

* 노인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공공부문이 재원이 들어간 경로연금,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급식, 물품 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의미함.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가구: 해당 년도 1년간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가구

3)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보육 지원의 욕구가 있는 가구 중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과 학비 지원의 욕구가 있는 가구 중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보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만5세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해당 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육지원서비스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경험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이용한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보육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만5세미만아동가구***}}{\text{만5세미만아동가구**}} \times 100$$

* 보육지원서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 만5세 미만 아동 가구: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이용경험이 있는 만5세 미만 아동 가구: 해당 년도 1년간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만5세 미만 아동가구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중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비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대상 학비지원과 모부자가정 대상 학비지원 등 공공재원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비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이용한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학비지원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학생가구***}}{\text{전체학생가구**}} \times 100$$

* 학비지원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가구 등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지원서비스 모두 포함.

** 전체 학생가구: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이용경험이 있는 학생 가구: 해당 년도 1년간 학비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가구

4)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이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등록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재활보조가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자동차 관련 지원 서비스로 공공부문 재원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용경험은 해당년도 1년간 상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장애인가구***}}{\text{전체장애인가구}} \times 100$$

* 장애인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비등록장애인 포함).

**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공공부문이 재원이 들어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 재활보조가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 자동차 관련 지원을 말함.

***이용경험이 있는 장애인가구: 해당 년도 1년간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가구

5)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전체 가구 중 취약 가구원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기 분석한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산출한다. 이 때, 해당년도 1년간 취약 가구원 대상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면 경험있음으로 간주한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지표 산출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취약계층복지서비스*이용경험률} = \frac{\text{이용경험이있는가구**}}{\text{전체가구}} \times 100$$

*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미함.

**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 해당 년도 1년간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

2.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가.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지표는 빈곤 및 공공부조 제도 분석에서 의미있는 범주로 간주되는 지역, 가구규모, 가구형태별로 분석하여 결과의 해석을 풍부하게하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다음 표는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 가구 중 기초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약 10%포인트 수급률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는 2005년도 가 계측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 연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비계측년도에 비해 계측년도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높아지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수급가구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수급률은 낮게 산

출될 수 있다. 반면에 비계측년도인 2006년과 2007년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규모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수급률의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수급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앞 장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로 분석한 빈곤지표에서 빈곤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 없이 대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빈곤율이 낮고, 농어촌 지역의 빈곤율이 높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1〉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9.31	33.05	27.54	23.44
2006	39.05	44.43	36.73	30.39
2007	41.48	49.89	37.76	30.1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규모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3인~6인 이상 가구의 욕구 대비 수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1인 가구 역시 욕구 대비 수급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0.43%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2인 가구의 경우는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0.09%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29.31	36.95	23.20	29.44	29.10	20.95	26.16
2006	39.05	46.03	32.39	41.17	35.49	37.70	33.83
2007	41.48	46.46	32.30	48.14	40.05	62.96	34.4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형태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

음 표와 같다. 모부자 가구 욕구 대비 수급률이 2007년도에는 84.48%로,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 가구 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7년도의 경우 50.99%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가 기초 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노인가구의 욕구 대비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2007년의 경우 36.01%에 그쳤다.

〈표 7-3〉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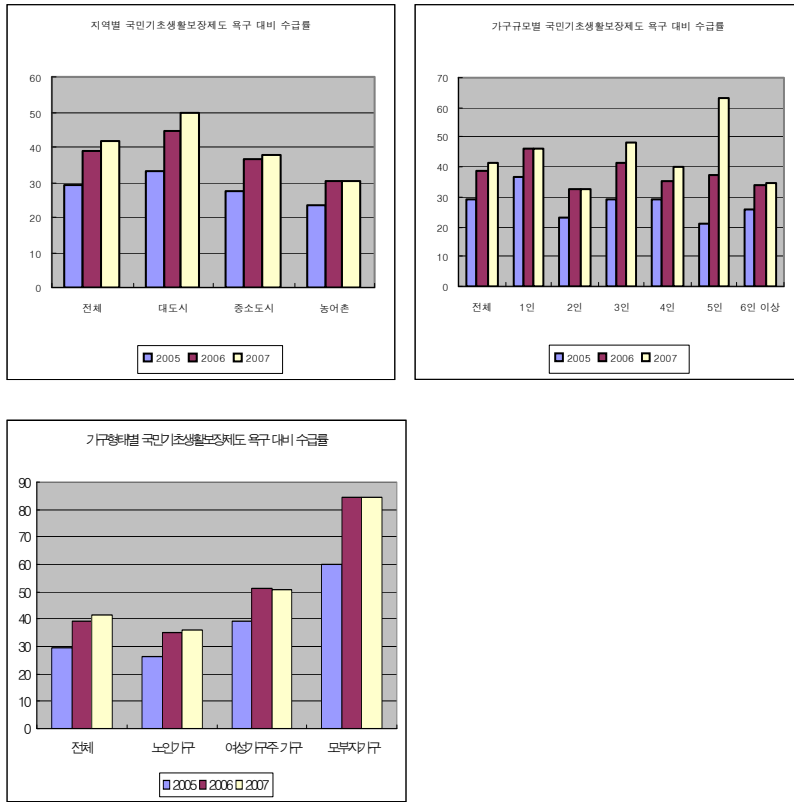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가구
2005	29.31	26.09	39.32	60.12
2006	39.05	35.00	51.11	84.33
2007	41.48	36.01	50.99	84.48

주: 1)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다음 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지역별로 나타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7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가 총생활비의 42.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2005년~2006년 사이에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은 증가했으나, 2006년~2007년 사이 42.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대도시의 보장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06년의 경우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순으로, 2007년의 경우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해석할 때, 현금급여의 보장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현물로 제공되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³⁹⁾.

〈표 7-4〉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47.52	48.80	46.45	45.58
2006	49.63	49.05	50.30	49.92
2007	42.15	42.49	41.16	44.0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에 보장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경우 보장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2005년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66.02%, 2006년도 70.89%, 2007년도 57.78%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6인 이상 가구의 보장수준은 경우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21.06%, 17.22%, 15.66%에 그쳤다.

〈표 7-5〉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47.52	66.02	47.55	30.53	34.46	22.51	21.06
2006	49.63	70.89	48.80	33.91	32.06	21.53	17.22
2007	42.15	57.78	43.36	30.70	23.23	24.21	15.6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노인가구의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욕구 대비 수급률이 모부자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즉, 모부

39)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총생활비 변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총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과소추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가구의 경우 많은 비율이 수급 가구로 선정되지만, 현금급여의 보장수준은 낮은 반면에, 노인 가구의 경우 모부자 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낮은 비율이 수급 가구로 선정되지만, 현금급여의 보장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1인 가구의 보장수준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6〉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가구
2005	29.31	55.13	51.05	34.25
2006	39.05	58.30	53.97	36.95
2007	41.48	49.46	44.78	33.58

주: 1)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수급가구의 경상 소득 중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이 근소한 차이로 보장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어촌, 중소도시의 보장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보장수준은 연도별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7-7〉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42.09	43.17	40.79	41.73
2006	43.41	44.07	42.62	43.22
2007	42.08	43.54	40.57	41.09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은 가구의 보장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가구의 보장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표 7-8〉 가구규모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42.09	55.17	44.41	28.08	32.74	22.37	21.16
2006	43.41	58.39	45.42	30.54	29.81	21.03	16.65
2007	42.08	56.09	42.97	32.40	24.09	27.53	16.50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지표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생활비 대비 보장수준과 마찬가지로 노인 가구, 여성가
 구, 모부자 가구 순으로 높은 보장수준을 보였다.

모부자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는 노인 가구에 비해 수급률은 높지만, 보장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즉, 빈곤 노인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가구로 선정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선정된 경우에는 근로무능력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급여액의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빈곤 모부자 가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수급가구로 선정되는 비율은 높지만, 근로능력자 가구로 근로소득이 일정액이 있어, 상대적으로 현금급여액의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9〉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대비 보장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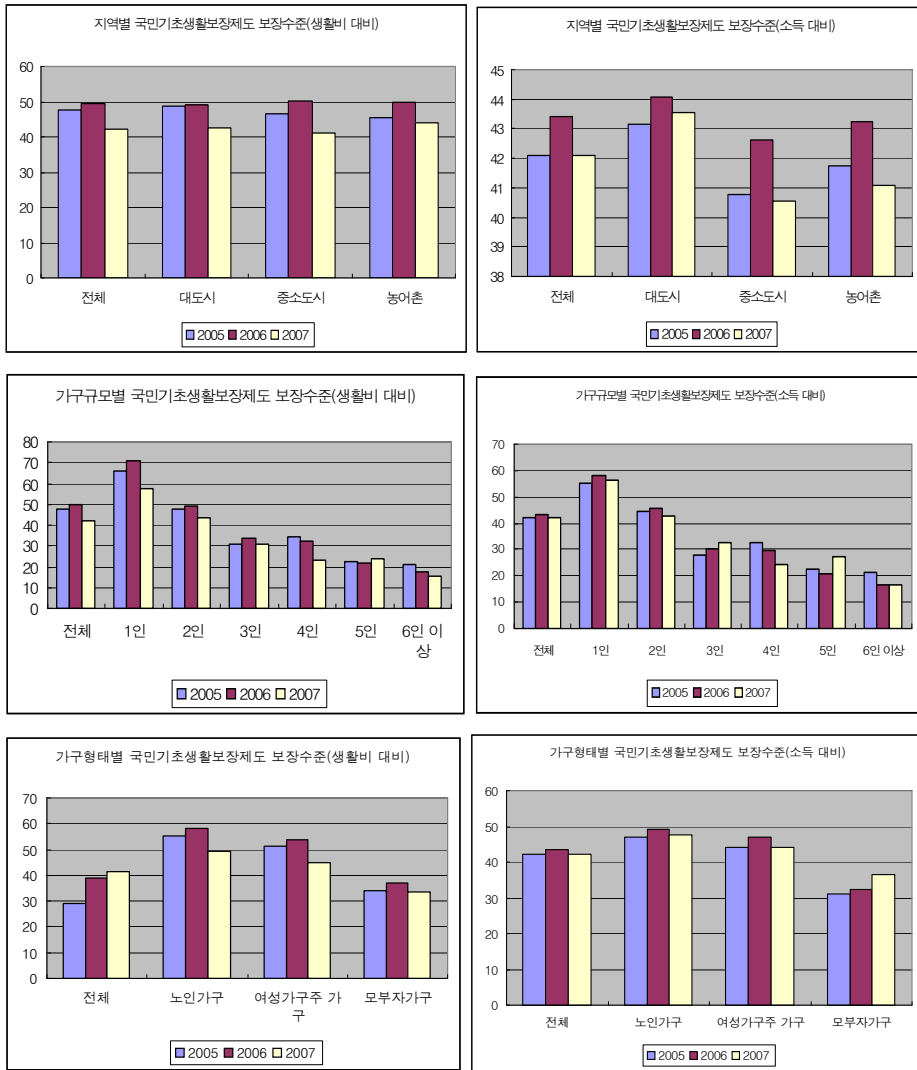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가구
2005	42.09	47.08	44.02	31.06
2006	43.41	49.09	46.91	32.41
2007	42.08	47.64	44.22	36.50

주: 1)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



나.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수급 지표는 소득 계층별로 연금 수급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분위별 수급률을 분석한다. 특수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과 이 중 국민연금만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공적연금 수급률

다음 표는 공적연금 수급률을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공적연금 수급률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분위가 낮은 집단의 수급률이 낮고,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의 수급률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2007년의 경우 1분위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16.87%인데 비해, 5분위의 수급률이 40.54%로 나타나 2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7-10〉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20.09	13.99	20.14	29.92	31.60	25.24
2006	23.59	15.47	24.44	34.01	35.41	36.64
2007	25.66	16.87	27.80	35.18	36.95	40.54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2)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수급률을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6% 이하로, 앞서 살펴본 공적연금 수급률 20%대가 대부분 특수직역연금 수급률임을 알 수 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은 분위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국민연금 수급률은 낮은 분위에서 높게, 높은 분위에서 낮게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1분위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7.63%임에 반해 5분위의 수급률은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가 아직까지 수급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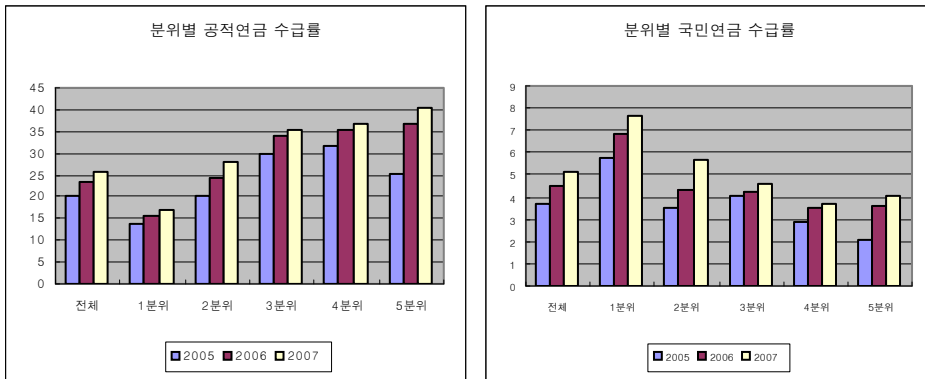
〈표 7-11〉 분위별 국민연금 수급률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5	3.66	5.77	3.53	4.08	2.88	2.03
2006	4.52	6.88	4.32	4.24	3.54	3.62
2007	5.12	7.63	5.67	4.59	3.69	4.04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그림 7-3] 분위별 공적연금 수급률



다.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은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의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로, 저소득층 분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역, 가구규모, 가구형태별로 분석했으며,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각 취약계층 대상별 프로그램을 포괄하여 이용경험률을 분석했다.

1)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률

다음 표는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전체 가구의 1.80%만이 1년간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한 가구도 대도시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지역의 가구 중 3.20%가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농어촌 지역의 가구 중 0.09%만이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2.20	3.15	1.55	-
2006	1.45	2.89	0.19	-
2007	1.80	3.20	0.69	0.09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은 다음 표에 나타나있다. 전체적으로 이용경험률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구의 이용경험률이 높고, 규모가 큰 가구의 이용경험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7-13〉 가구규모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2.20	2.83	2.67	2.50	1.62	1.08	-
2006	1.45	2.68	2.05	1.06	0.81	0.57	1.56
2007	1.80	3.90	2.05	1.67	0.84	0.90	-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앞서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과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즉, 모부자 가구의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높고, 다음으로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4〉 가구형태별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가구
2005	2.20	2.53	4.35	6.05
2006	1.45	1.89	3.73	4.59
2007	1.80	1.87	4.10	4.11

주: 1)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한편,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률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은 앞서 살펴본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보다 더 낮아 전체 가구의 2% 미만인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용경험률의 차이는 연도별로 상이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7-15〉 지역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5	1.03	0.66	1.61	-
2006	1.25	1.83	0.81	0.35
2007	1.39	0.75	2.16	0.83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률을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규모가 작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오히려 가구규모가 큰 가구의 이용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7-16〉 가구규모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005	1.03	0.53	1.32	1.13	0.89	1.69	-
2006	1.25	0.78	1.69	1.42	1.01	1.54	0.56
2007	1.39	0.76	1.53	1.72	1.13	2.53	0.52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다음으로,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을 가구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률과 유사하게 모부자 가구의 이용경험률이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2005년~2007년 3년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7〉 가구형태별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률

(단위: %)

	전체	노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부자가구
2005	1.03	1.07	0.68	3.39
2006	1.25	0.88	1.74	6.23
2007	1.39	0.98	1.77	7.65

주: 1) 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모부자가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2)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다음 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의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제시한다. 2007년의 경우, 1년간 노인가구 중 노인대상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2.9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 10.44%가 1개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으며, 3.76%의 노인가구가 2개 프로그램을,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도 8.78%에 달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2005년~2007년 3년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8〉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18.22	7.65	3.84	6.74
2006	21.31	9.37	3.11	8.84
2007	22.98	10.44	3.76	8.7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3) 아동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다음 표는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36.96%가 1년 중 보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5세 미만 아동이 1명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34.08%가 보육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5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가 47.55%에 달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2007년 3년간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표 7-19〉 만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만5세 미만 아동 수	
		1명	2명 이상
2005	29.43	28.56	33.17
2006	31.82	29.53	41.19
2007	36.96	34.08	47.55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한편,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서비스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07년의 경우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18.79%가 1년간 학비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중고등학생이 1명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15.64%가 학비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이용경험률이 2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0〉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학비지원 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중고등학생 수	
		1명	2명 이상
2005	11.79	9.59	15.64
2006	16.87	14.91	20.69
2007	18.79	15.64	24.73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4)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의 경우 1년간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32.97%로, 장애인 가구 중 1개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27.73%, 2개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3.88%, 3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1.36%로 대부분이 1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수		
		1개	2개	3개 이상
2005	29.73	26.52	2.90	0.31
2006	34.60	30.06	3.96	0.58
2007	32.97	27.73	3.88	1.36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5)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07년의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이 있는 취약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22.57%가 취약 가구원 대상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12.60%가 아동복지서비스를, 7.01%가 노인복지서비스를, 5.18%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2007년 3년간 취약 가구원 대상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표 7-22〉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2005	16.61	4.88	9.54	3.82
2006	21.22	6.12	11.76	5.13
2007	22.57	7.01	12.60	5.18

자료: KOWEPS 1~3차년도 원자료.

3. 복지수급 지표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이상의 복지수급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표를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3개년 모두에서 욕구 대비 수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여전히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 지역이,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가구에서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최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를 통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적연금제도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 국민연금만을 분석하면 6%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적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위별 공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수급률을 분석한 결과,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고, 국민연금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매우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그 기능이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향후에 공적연금 수급액의 보장수준을 분석하여, 연금급여의 질적 보장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가구원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약 20%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6% 미만의 가구만이 1년 동안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ocial Affairs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미정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간강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미정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미정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미정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미정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미정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미정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2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미정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제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임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가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계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